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9
기획연구
시리즈12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9년 기획연구 보고서

Part1. 기부비영리단체(NPO)의 투명성에 관한 금전적 가치와
기술혁신의 영향에 관한 연구 • 강형구, 한상훈

Part2. 계획기부도입을 위한 소득세제 연구 • 서희열, 이창규

Part3. South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Researcher Associations
• 김성주, 정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9년 기획연구 보고서

Part1.

기부비영리단체(NPO)의 투명성에 관한 금전적 가치와 기술혁신의 영향에 관한 연구
- 강형구, 한상훈

Part2.

계획기부도입을 위한 소득세제 연구
- 서희열, 이창규

Part3.

South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Researcher Associations
- 김성주, 정진경

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지난 2001년 창립 이래,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부문화 전반에 대한 심층적 연구, 모금전문영역 구축과 전문가 양성의 산실, 연구결과 축적과 발표로 기부문화연구 확산을 모토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기부문화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민간기관으로 쉽지 않은 20년 가까이 되는 연구사업에는 사회복지, 회계세무, 법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의 헌신적인 기여와 비영리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진행되어온 ‘기빙코리아’가 한국 기부문화지수에 관한 연구를 장기간 깊이 있게 진행했으며, 기획연구를 통해 비영리섹터에 맞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연구는 2013년부터 매년 연구프로젝트를 정기화시키며 좀 더 다양한 주제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께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주셨습니다. 특히 새롭게 생산되고 있는 비영리 관련 다양한 전략과 기반을 튼튼히 해줄 법제도 및 비영리연구의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비영리단체(NPO)의 투명성에 관한 금전적 가치와 기술혁신의 영향에 관한 연구’의 강형구, 한상훈 교수님, ‘계획기부도입을 위한 소득세제 연구’의 서희열교수님, 이창규 박사님, 그리고 ‘South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Research Associations’의 김성주 교수님, 정진경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기획연구가 현장을 읽어내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
박 성 연

차례

PART.1 09

기부비영리단체(NPO)의 투명성에 관한 금전적 가치와 기술혁신의 영향에 관한 연구
- 강형구, 한상훈

| 연구 1 | 기부투명성 혁신의 경제적 가치

1. 서론 13

2. 선행연구 18

기부의향과 신뢰 및 이미지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
블록체인과 투명성에 관한 연구

3. 연구방법론 21

연구모형
설문 및 분석전략
분석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 분석결과 2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부경험 차이 고려
투명성에 따른 기부금액 차이분석
투명성에 따른 기부의향 차이분석
기부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5. 결론	32
-------	----

참고문헌	35
------	----

Ⅰ 연구 2 | 비영리단체(NPO)의 투명성과 기술혁신에 대한 뇌인지과학적 판단

1. 서론 & 선행연구	43
--------------	----

2. 연구방법	45
---------	----

참가자

실험 절차

실험 장비

fNIRS 데이터 분석

3. 분석결과	48
---------	----

행동 결과

fNIRS 결과

fNIRS 활성화 개인차 분석

4. 논의	51
-------	----

참고문헌	53
------	----

Part2.	55
계획기부도입을 위한 소득세제 연구 – 서희열, 이창규	
I. 서 론	59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II. 계획기부의 개관	63
1. 계획기부의 개요	
2. 국내 기부 현황	
III. 소규모 민간 비영리 단체(NPO)의 계획기부의 도입 가능성	73
1. 총설	
2. 계획기부의 특성	
3. 계획기부의 구체적 도입 방안	
4. 비즈니스 모델로서 텍사스 감리교 재단의 분석	
IV.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세제상의 개선방안	85
1. 기부금 관련 세제에서의 이슈와 개선 방향	
2. 계획기부의 도입 방안	
V. 결 론	94
참고문헌	97

Part3.	99
South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Researcher Associations - 김성주, 정진경	
비영리학회연구요약본	103
Introduction	113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GO Studies (KANGOS)	115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History	
Activities and Publications	
Contributions to the South Korean Nonprofit Sector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KANPOR)	
Origins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Activities	
Contributions to South Korean Nonprofit Sector	
History of Korean Nonprofit & Philanthropy Researchers' Network (KNPRN)	130
<Reference>	133

2019년
기획연구
보고서

Part.1

기부비영리단체(NPO)의 투명성에 관한 금전적 가치와 기술혁신의 영향에 관한 연구

강형구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상훈 |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심리학과 교수



책임연구자



강형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학력

듀크대학교 푸쿠아 경영대학 박사

주요경력

이화여자대학교, 리만브라더스

연구실적

Olga Hawn, Hyoung-Goo Kang , (2018), The Effect of Market and Nonmarket Competition on Firm and Indust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Sinziana Dorobantu , Ruth V. Aguilera , Jiao Luo , Frances J. Milliken (ed.) Sustainability, Stakeholder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dvances in Strategic Management, Volume 38) Emerald Publishing Limited, pp.313 – 337

Kang, H. G., Woo, W., Burton, R. M., & Mitchell, W. (2018). Constructing M&A valuation: how do merger evaluation methods differ as uncertainty and controversy vary?. *Journal of Organization Design*, 7(1), 2.

공동연구자



한상훈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심리학과 교수

학력

듀크대학교 심리뇌과학 박사

주요경력

듀크대학교 인지신경과학센터 리서치펠로우

연세인지과학주임교수

연세심리학과 학과장

연구실적

Kim, H. Y., Shin, Y., & Han, S. (2014). The reconstruction of choice value in the brain: A look into the size of consideration sets and their affective consequence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6(4), 810–824.

정주연, & 한상훈. (2011). 친사회적-도덕적 동기 및 도덕적 의사결정의 신경학적 기제에 대한 개관 연구. *감성과학*, 14(4), 555–570.

기부비영리단체(NPO)의 투명성에 관한 금전적 가치와 기술혁신의 영향에 관한 연구 Can money buy NPO transparenc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강형구¹⁾한상훈²⁾

연구 1 | 기부투명성 혁신의 경제적 가치

1. 서론

본 논문은 비영리기관 투명성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특히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측정한다. 이는 모두 최초의 학술연구다.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투명성이 중요하다던가 블록체인이 도움이 된다던가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우리 연구는 비영리기관들이 투명성에 대한 투자, 최신 기술 도입에 대한 투자에 직접적이고 정량적인 도움을 주는 최초의 연구다.

비영리기관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는 잘 알려져있다. 사례를 보자. 2019년 1월, 시민단체가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대표를 횡령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으로 인하여 비영리기관(NPO)의 운영 투명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케어 대표는 구조한 동물 250여 마리의 치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실시하였고, 그 사실을 후원자 및 연차보고서에 알리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후원

1)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

2) 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심리학과 교수

금을 받았고 이를 일부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비영리기관 회계 처리가 폐쇄적이고 운영에서 파생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사시스템이 부재하고 이를 악용한 탈법 행위가 용인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기부자의 선한 의도에 의해 기부한 금액이 애당초 기부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 및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이와 상응하는 비영리기관의 엄격한 도덕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몇몇 비영리기관의 뒤흔어진 운영 윤리의식과 시스템은 소위 '기부 포비아(phobia)'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작 정직하게 운영해 온 비영리기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비영리기관의 운영에 있어 기부금은 가장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이다. 박원순(2004)은 비영리기관의 주요 재원을 회원들의 회비수입과 기부금으로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인 아름다운재단의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입 81억 8천만원 중 62억 5천만원이 기부금 수입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부금은 비영리기관의 재정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따라서 기부금의 적법한 모집과 집행은 비영리기관의 운영과 신뢰성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은 사회전체의 공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은 추상적/사회적인 목표에 기반한 기관 정당성(legitimacy)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반하여 영리조직은 이익극대화(profit maximization)라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목적에 근거한 정당성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때문에 비영리기관의 경우 투명성이 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사회가 산업화 및 고도화 되면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의 영역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비영리기관이 좋은 선택지가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영역을 교육과 복지 등으로 저변을 넓혀가면서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영리기관의 투명성 확보는 사회혁신에 중요한 기반이다.

대다수 비영리기관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비영리기관들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통한 수익이 창출이 불가능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나 일반 대중의 기부금이 없이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영리기관의 기부금 모집방법의 적법화, 효율화 그리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적법한 감사, 공시 시스템의 구축은 사회적 효용의 발생에 기여하는 비영리기관의 존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비영리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기부금 모집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속적인 기부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

뢰가 지속적 기부 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비영리기관의 이미지, 인지도, 후원금 사용내역 등은 신뢰도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김준희, 2009). 비영리기관의 신뢰도 형성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후원금 사용내역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되어온 중요한 요인이다(박원순, 2004; 김성호 외, 2015).

특히 비영리기관의 운영, 회계보고 투명성은 비영리기관의 신뢰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투명성은 비영리기관의 재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부자들의 기부 의사결정에 유용성에 기여하는 것이다(박원순, 신현한, 강동관, 권인수 2006). 투명성은 기부자들에게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이 활용되는 곳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신뢰도가 향상되면 기부자들은 기부금액을 높이거나 지속적으로 기부할 의도가 생긴다. 이처럼, 비영리기관 운영의 투명성은 추진하는 사업들의 성공은 물론, 기관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투명성은 얼마나 중요할까? 투명성이 증가하면 기부가 늘어날까? 투명성은 효과에 관계없이 추구해야 하는 원칙일 뿐이고 공리적 가치는 없는가? 기존 문헌들은 주로 비영리기관에서 투명성의 중요성을 연구해왔지만, 아직 비영리기관 투명성의 구체적 가치 및 측정에 관한 연구는 없다. 투명성의 중요도와 기부의 지속가능성과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의 구체적 가치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는 비영리기관 관련 연구만의 한계는 아니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치는 여전히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어려웠던 이유는 첫째, 투명성의 변화에 따른 기부자들의 의사를 조사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 기술 등의 개발과 적용이 미진했다. 첫번째 문제는 기부경험자나 의향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투명성을 높이는 기술개발의 문제는 블록체인이 개발되고 응용되면서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암호화화폐의 기술기반으로 알려진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 집중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달리 상호분산원장을 통해 보안성과 확장성 그리고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부문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한데 특히 거래의 경우 참여자들 쌍방의 기록이 남게 되고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이용하여 장래에는 비영리기관의 비롯한 다양한 단체의 기부금 모집에도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기부금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분산원장을 통해 기부금의 모집과 활용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활용처와 사용금액등이 모든 기부 참여자에게 밝혀지게 되며, 이는 비영리기관의 기부금 모집과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비영리사업에 적용 할 시 블록체

인 기술의 투명성 성과가 나타나는지 혹은 어떤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에 적용해 보는 시도가 2019년 현재 대부분 초기단계이기 때문이다. 비영리기관의 투명한 자금 모집과 집행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 시키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에 파생되는 효과인 거래의 투명성을 측정하고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비영리기관 투명성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사업의 성격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따른 투명성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 한다. 이는 비영리기관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그 가치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사회적 가치 생성프로세스가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영리기관의 투명성이 제고 된다면 이는 파생적으로 연결된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된다.

우리 연구는 투명성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금전적 산정을 위해 먼저 평소의 기부금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기부금 모집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이 개선되었을 시기의 기부금액을 가상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그 둘을 비교한다. 피 설문자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로 인해 획득되는 투명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투명성의 가치측정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우리 연구에 대한 강건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설문을 제시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시나리오오는 대상의 힘이 존재하거나 없는 경우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시나리오로 구성했다. 우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액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집에 관한 투명성 이슈는 끊이질 않았다. 정치자금 모집에 관한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연구는 정치에서 투명성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시나리오도 연구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투명성에 관한 블록체인의 가치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계산한다.

우리 연구는 다양한 분석 모델을 통해 투명성 강화가 기부금액의 증가와 기부의사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이 증대될 경우 기부의향이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투명성이 개선될 경우 약 1만 3천원의 기부금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적 가치의 향상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효과는 평균 기부금액과 비교했을 때 약 28%가 증가하는 효과다. 특히 중앙집중 방식에 의한 투명성 효과는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지만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의 효과는 뚜렷하다. 이 결과는 투명성이 중요하고, 어떤 투명성이 특히 중요한지,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비영리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증대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은 기부금액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다 주며 이를 통해 비영리기관의 운영의 영속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블록체인의 특성인 투명성 제고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연구를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의 향상에 블록체인 기술의 제 특성 중 투명성 제고라는 요인이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여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수의 비영리기관의 불투명한 운영 시스템이 밝혀지면서, 기부자의 신뢰가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늦어지면 기부자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비영리기관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우리 연구에 의하면 투명성이 담보된 새로운 운영 시스템의 도입은 비영리기관의 성공과 지속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우리 연구는, 사업별, 투명성 유지 방법별로 잠재적 기부자들의 기부의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투명성이 비영리기관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가져올 가치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에 관련된 기대효과를 이해관계자들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기관은 투명성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여 투명성을 담보한 새로운 운영시스템의 구축에 드는 비용과 그 현재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적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투명성을 담보하는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기술의 도입에 관한 정량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비영리기관의 경영자는 사업과 투명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직관을 얻을 수 있고, 투명성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

둘째, 블록체인 기반 투명성은 기부자가 비영리기관을 조사하고 의사결정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다. 기부자는 투명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구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비영리기관에 신뢰를 가지고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운영결과를 신뢰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에 더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정책 당국의 경우 투명성을 담보한 운영 시스템의 유무에 따라 비영리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과 기타 정책을 차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의 적용에 따른 투명성 확보와 이를 통한 비영리기관의 혁신의 가치를 이해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우리 연구에서는 2장에서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관련된 연구결과 및 투명성이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우리 연구의 연구전략과 연구방법론 그리고 모형에 대해 논의한다. 4장에서는 연구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해석을 제시하고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2. 선행연구

2.1. 기부 의향과 신뢰 및 이미지

비영리기관은 공공이나 민간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비영리기관들은 영리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아 재정유지 및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비영리기관의 후원이나 기금모집전략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해룡, 박민수, 2013; 강철희, 양진욱, 2008; 이동영, 변은지, 2007).

기부의제나 공간 거리감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공통적으로 비영리기관의 이미지가 기부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이미지가 반영되는 인지도가 기관몰입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기부행위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정아, 김근식, 윤옥화, 2014). 특히, Michel and Rieunier(2012)에서는 비영리기관의 브랜드이미지가 기부금액과 기부횟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이들은 확정적요인분석(CFA)을 통해 4가지 요인(Usefulness, Efficiency, Affect, Dynamism)의 브랜드이미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 이미지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영리기관의 브랜드 이미지의 경우 31%의 기부금액 수준과 24%의 기부횟수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³⁾ 같은 맥락에서 비정부기관(NGO)의 브랜드 이미지가 기부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Bennett and Gabriel, 2003; Do Paco, Rodrigues, and Rodrigues, 2014).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할 때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에는 효율적인 관리 또는 잘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

투명성은 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회계학의 연구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영리기관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여기서 투명성은 Standard and Poors(2002)에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재정상의 이행 및 기업의 지배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시기적절한 공개’로 정의하고 있다(박현준 외 2004, 6p). 비영리기관에 있어서는 기부자들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3) 그중 efficiency 계수가 0.30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efficiency는 well-managed, provides an excellent service to beneficiaries, uses assets wisely로 구성되어있다(Michel and Rieunier, 2012).

다음과 같이 '재정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기부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으로 의미된다. 이러한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은 과거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에 비영리기관의 투명성 제고는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박원순, 2004; 김성호, 안명아, 2015; 문순영, 강창현, 2012). 그리고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영리기관 위주의 회계제도정립,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비영리기관은 투명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는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기능과 공익사업을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관신뢰성이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대부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형식적 이사회의 구성 및 외부감사의 부재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김완희 외 2013).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1년도의 기부금비리사건 등이 존재한다.

투명성 확보는 정보의 수요자인 기부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비영리기관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비영리기관은 기부자 및 기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제공 및 피드백을 통해 그들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보다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Hale, 2013).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이것이 비영리기관의 신뢰성 확보로 이어져 더 많은 금융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Behn et al, 2010). 또한 기관의 투명성 확보는 수혜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기관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chmitz et al, 2012).

인터넷기술의 진보로 비영리기관의 투명성도 개선되고 있다. 비영리기관들은 기관 홈페이지에 연차보고서등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일부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보의 완전성 및 공개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세부적인 재무 정보 파악이 어려운 등 정보공개 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김가을, 조상미, 2014). 또한 단순 재무 지표를 나열하는 것보다 기업의 추구 가치나 달성 가치 등과 같은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비영리기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Saxton et al 2014).

기존 회계시스템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하는 하나, 기존의 정보 채널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에 불과하여 기부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잇따른 비영리기관, 재단의 비리사건 이후 기부자들은 그들이 기부한 기부금이 본래 의도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해당 정보가 기부자에게 직접적이고도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나 현재 비영리기관의 정보제공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영리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제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로부터의 신뢰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Hale 2013). 또한 1990년대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비영리기관 비리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및 비영리기관이 지배구조 개선, 민간 감독기관 설립 등 여러 가지 투명성

확보 방안이 고려되었으나, 기술을 통한 자율규제가 비영리기관의 투명성 확보에 가장 유용한 방안이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Bothwell, 2004). 이 결과들은 기술진보를 통해 비영리기관들의 투명성을 높여 시도하고 있으나 기부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재정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기부 의향과 기부금액 그리고 재정지원금이 증가될 수도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전문성과 조직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긴 하나, 재정투명성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정숙, 문명재, 2015). 김성호 외(2015)는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이 기부 의도와 관계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들은 투명성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자신의 기부금이 적절한데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여 기부 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투명성이 기부 의사결정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재정적 정보의 공개가 재정적 정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성호 외(2015)에서는 투명성이 기부 의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거나 신뢰를 향상시켜 기부 의도를 증진시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투명성에 대한 가치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투명성을 정보제공과 손쉬운 정보전달에 가치를 두고 있다. 지금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투명성이 개선될 경우 기부 의향이 유의하게 증진될 것이라는 방향은 알 수 있으나, 기부금액 증가나 기부 의향의 향상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 연구에서는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도입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기부금 증진 수준 그리고 의향의 향상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2.3. 블록체인과 투명성에 관한 연구

블록체인은 Nagamoto(2008)에 의해 제안, 개발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상호분산원장(Mutual distributed ledger)이라는 기술을 활용한다. 기존의 중앙집중방식을 탈피하고 P2P(Peer to peer)방식으로 거래참여자들이 거래정보를 함께 기록하고 관리하는 형태이다. 거래를 함께 기록하며, 원장을 각각 보관하는 것이 상호분산원장기술이다. 이 기술은 중앙집중방식 보다 보안이 뛰어나며 투명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이 거래기록을 공개하고 위조나 변조가 어려워 기존의 방식보다 투명성이 높다.

블록체인은 최근 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지배구조와 관련된 연구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던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시키는 비용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Jensen and Mackling, 1976; 강소현, 최문섭, 2018). 강소현, 최문섭(2018)에서는 회계정보에서

경영자들의 자의적 이익조정이 존재할 수 있고 이 부분이 회계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이용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할 경우 재량적 조정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재량적 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하다. 이현주 등 (2019)에서는 블록체인기반의 회계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블록체인 기술은 실시간 자율회계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기존의 회계 방식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은 기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진재현, 고금지(2018)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이 보건의료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부금을 블록체인으로 받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블록체인을 통해 기부금을 받는다면 모금에 따라 분산장부가 기록된다. 이후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산장부에 한번 더 기록되게 된다. 이 경우 기부금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경우 투명성 개선효과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연구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을 경우 얼마나 더 기부할 것인지 그리고 기부의향을 어느정도로 향상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우리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관한 금전적 가치와 기술혁신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샘플은 총 620명이며, 수집된 자료를 Stata 14.0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투명성에 관한 금전적 가치와 기술혁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Figure 1과 같은 구조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1. 연구모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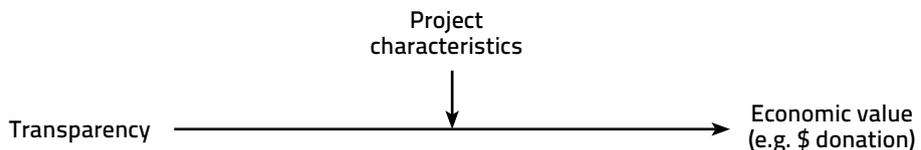


Figure 1에는 투명성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투명성 (Transparency)은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된 상황을 제시하였다. 즉,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투명성이 개선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설정한다. 프로젝트의 특성은 조절변수 (moderating variable)로 설정하였다. 우리 연구모형은 투명성의 개선과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투명성의 금전적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이다. 우리 설문에서는 프로젝트의 대상이 가진 권력 등에 따라 아래의 총 세가지로 구분하고 해당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1]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유기견과 유기묘 보호소에 대한 후원: “유기묘 보호소 A에서 알려드립니다. 유기묘를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의해 학대를 받아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된 고양이! 다행히도 고양이는 구조 후에 여러차례의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고양이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2] 상대적으로 힘이 존재하는 정치인의 후원: “정치인 A를 후원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정치를 약속하는 A 입니다. 제가 정치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열심히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3] 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후원: “환경보호단체 A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후원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전 보다 심해진 더위와 한파로 피해는 매년 커져갑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투명성과 관련된 기술의 혁신은 내부중앙시스템에 투명성 관련지표를 기록하는 것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은 투명성이 개선되었을 때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에 따라 후원의 여부와 후원금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3.2. 설문 및 분석전략

우리 연구의 설문시행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투명성을 제외하고 다른 특성은 동일한 비영리기관사업을 가상적으로 디자인한다. 둘째, 투명성에 관한 변화를 생성하고 가상의 사업에

반영한다. 이때, 통제그룹은 투명성에 대한 변화가 없으나, 실험그룹 A는 전통적 방식으로 투명성 해결, 실험그룹 B는 블록체인 등 혁신적 방법으로 투명성을 해결한다. 셋째, 각 사업에 대한 최대 지불의향을 조사한다. 넷째, 사업의 특성에 변화를 주어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우리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나이, 성별,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고려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응답자들의 기부의향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앙 관리시스템과 블록체인에 따라 응답자들의 기부방향 및 기부금액 차이를 비교하였다. 중앙관리시스템과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기부하려고 하는지 또는 얼마나 더 기부하려고 하는지 분석하였다. 넷째, 설문대상자들이 응답한 기부단체 투명성에 대한 중요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도, 블록체인 사용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의 응답을 변수화 하였다. 다섯째, 중앙 관리시스템과 블록체인에 따른 기부의향이 변수화 된 요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짓분석은 종속변수가 1 또는 0과 같이 이분형 변수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사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로짓분석을 통해 변수에 따라 응답자들의 기부의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응답정보들을 이용하여 투명성이 개선되기 전 기부금액 그리고 개선된 이후 기부금액을 이용하여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측정한다. 회귀분석에서는 응답자를 고려하여 클러스터링 된 표준오차를 활용한다.

3.3. 분석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우리 연구의 연구참여자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310명씩으로 표본의 절반이 남성 절반이 여성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본의 연령대는 각각 20대 152명, 30대 158명, 40대 152명, 50세 이상 158명으로 고르게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 미만은 116명으로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 이하는 411명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학원 이상 학력은 93명으로 전체의 1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200만원 미만과 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각각 20%와 17.4%로 나타났다. 참여한 응답자들의 직업은 회사원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기타, 주부,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 533명은 기부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체의 86%로 나타났다. 다음의 Table 1.은 우리 연구에 참여한 설문조사 대상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Table 1. 설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표는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우리 연구에서 구분한 인구사회학적특성은 크게 다섯 가지이며,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등이다.

항목		빈도(명)	백분율(%)
전체		620	100
성별	남	310	50.0
	여	310	50.0
연령	19~29세	152	24.5
	30~39세	158	25.5
	40~49세	152	24.5
	50세	158	25.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6	18.7
	대학교 졸업	411	66.3
	대학원 재학 이상	93	15.0
월 평균 소득	월 200만원 미만	124	20.0
	월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30	21.0
	월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08	17.4
	월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89	14.4
	월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0	9.7
	월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2	5.2
	월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1	5.0
	월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	2.4
	월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1	1.8
	월 1,000만원 이상	20	3.2
직업	주부	82	13.2
	학생	55	8.9
	회사원(공, 사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	258	41.6
	공무원(사법, 행정, 교육 등)	31	5.0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46	7.4
	자영업(사업)	47	7.6
	기타	101	16.3
기부 경험	있다	533	86.0
	없다	87	14.0

평균 기부금액은 약 4.8만원이고 표준편차는 1만원이 조금 넘는다. 블록체인 도입시 응답자들은 평균 2.3만원을 추가지급할 의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내부중앙시스템을 통한 투명성 관리의 경우 약 2만원을 추가지급할 의향이 있다. 기부의향에도 블록체인과 내부중앙시스템간 차이가 존재한다. 블록체인과 내부중앙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각각 기부의향이 71%, 65% 가량 된다.

4. 분석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부경험 차이 고려

우리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기부경험의 차이 분석한다. 먼저,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이 85.5%, 여성이 86.6%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분석하였을 때, 20대에는 84%, 30대는 83.5%, 40대는 88.2%, 50세 이상은 88%가 나타났다. 연령집단간의 차이 또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력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78.4%의 기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졸업자들의 경우 86.6%, 대학원 졸업자 이상의 경우 92.5%의 기부경험이 존재한다. Anova 분석결과 F값이 4.46으로 학력에 따른 각 집단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 이상 그룹의 경우 대학졸업 그룹과 고등학교 졸업이하 그룹과 비교했을 때 더 기부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월 평균소득에 따른 구분결과, 집단간 차이가 10%내 유의하였으나 각 집단별 차이는 없었다. 직군의 경우 공무원은 모두 기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직의 경우 89.1%의 기부경험, 회사원의 경우 87.2%, 자영업은 85.1%의 기부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군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Table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부경험여부

본 표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기부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부경험은 더미변수로 한번이라도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1 아닌 경우 0으로 설정하였다. F값의 유의확률은 Oneway Anova분석의 f-test 값을 작성하였으며, 안의 괄호는 p-value이다. 우리 연구에서는 Scheffe방식과 Bonferroni방식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사후검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은 10% 미만에서, **은 5%미만에서, ***은 1%미만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구분	집단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성별	남	0.855	0.353	0.12 (0.728)	
	여	0.865	0.343		
연령	20대	0.842	0.366	0.76 (0.52)	
	30대	0.835	0.372		
	40대	0.882	0.324		
	50세 이상	0.880	0.326		
학력	고등학교 졸업(a)	0.784	0.413	4.46** (0.011)	c > a ** b > a *
	대학교 졸업(b)	0.866	0.341		
	대학원 졸업(c)	0.925	0.265		
월 평균 소득 (단위: 만원)	월 200 미만	0.782	0.414	1.71* (0.083)	
	월 200 ~ 300미만	0.838	0.369		
	월 300 ~ 400 미만	0.861	0.347		
	월 400 ~ 500 미만	0.854	0.355		
	월 500 ~ 600 미만	0.933	0.252		
	월 600 ~ 700 미만	0.938	0.246		
	월 700 ~ 800 미만	0.903	0.301		
	월 800 ~ 900 미만	0.933	0.258		
	월 900 ~ 1,000 미만	1.000	0.000		
월 1,000 이상	0.950	0.224			
직업	주부 (a)	0.805	0.399	1.46 (0.189)	
	학생 (b)	0.836	0.373		
	회사원 (c)	0.872	0.335		
	공무원 (d)	1.000	0.000		
	전문직	0.891	0.315		
	자영업	0.851	0.360		
	기타 (e)	0.832	0.376		

4.2. 투명성에 따른 기부금액 차이분석

우리 연구의 목적은 투명성의 금전적 가치와 투명성에 의해 기부의회향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기부의회향과 기부금액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에 대한 의미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연구는 각 응답자가 생각하는 비영리 기관의 투명성과 연관된 정보(재무 정보, 이사회 정보, 연차보고서 정보)의 중요도 및 기술에 대한 의미 등을 조사하여 요인화 하였다. Table 3은 우리 연구에서 진행할 분석의 요약통계량을 나타냈다.

Table 3. 요약통계량

본 표는 분석의 주요변수인 블록체인 또는 내부중앙시스템 도입 시 기부 의향과 각 변수들의 요약통계량을 나타냈다. 기부단체 투명성 중요도와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도, 블록체인 사용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한 요인 값이며,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는 리커트 7점척도로 질문한 자료이다.

	N	Mean	Std	25%	50%	75%
기부금액(단위 : 만원)	533	4,774	11,483	1,000	2,000	3
블록체인 도입 시 추가기부금	438	2,289	2,679	1,000	1,000	3
내부중앙시스템 도입 시 추가기부금	400	1,969	2,327	1,000	1,000	3
블록체인 도입 시 기부 의향	620	0,706	0,456	0,000	1,000	1
내부중앙시스템 도입 시 기부 의향	620	0,645	0,479	0,000	1,000	1
투명성에 있어 연차보고서의 중요도	620	0,000	0,870	-0,550	0,157	1
투명성에 있어 이사회 정보 중요도	620	0,000	0,914	-0,561	0,007	1
투명성에 있어 재무정보 중요도	620	0,000	0,869	-0,559	0,148	1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620	2,895	1,656	1,000	3,000	4

분석의 모형은 설문대상자들이 응답한 기부의회향 금액을 신기술이 도입되어 투명화가 개선될 경우 1 아닌 경우 0으로 설정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분석하는 모형이다. 분석모형의 통제변수로는 요인화 된 변수들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업, 지역, 종교여부, 소득수준, 결혼여부, 자녀여부)를 활용하였다. 투명성이 기부자들의 금전적 가치에 미치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투명성 개선에 따른 기부금액 변화분석

본 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투명성이 개선되었을 때 기부자들이 얼마를 기부할 것인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Transparency는 더미변수로 기술개선을 전제할 때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설정하였다. 기술의 개선은 블록체인과 내부중앙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Column(2)는 블록체인을 전제할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Columns(3)은 내부중앙시스템을 전제할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표준오차는 각 응답자별 Clustering을 실시하였고 괄호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한다. *은 10% 미만에서 유의한 경우, **은 5%미만에서 유의한 경우, ***은 1% 미만에서 유의한 결과를 의미한다.

Unit: 10,000 KRW	(1) All	(2) blockchain	(3) Center
Transparency	1,344*** (4.23)	1,096*** (3.79)	0.416 (1.20)
Base knowledge level of blockchain	Yes	Yes	Yes
Demographic Controls	Yes	Yes	Yes
Response cluster	Yes	Yes	Yes
N	1,362	1,362	1,362
adj. R-sq	0.043	0.041	0.037

Table 4의 (1)의 결과에 따르면, 기술개선으로 인한 투명성이 증가될 때 다른 집단 대비 1.34만원을 더 기부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1%미만에서 유의한 결과이다. 기술개선으로 인한 투명성 강화를 가정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들은 평소 4.77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1.34만원은 28.1%증가한 금액이다. 투명성의 개선은 투자금액을 약 28%가량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선할 경우 전통적인 내부중앙시스템에 정보를 공개할 때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4의 (2)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성 개선의 경우 개선되지 않거나 또는 내부중앙시스템을 통해 개선된 결과 보다 1.096만원을 더 기부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 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Table 4의 (3)표와 비교할 때, 블록체인을 통해 개선할 경우 효과가 더 높으며, 기부자들은 일반적으로 투명성이 개선된다면 1.34만원을 더 기부할 의향이 있고 그 중 블록체인의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에서 투명성 일반의 계수가 1.34만원, 블록체인으로 인한 투명성 계수가 1.096만원이다. 언뜻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관측치 차이 등의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3. 투명성에 따른 기부의향 차이분석

투명성의 개선은 기부의향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에 우리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투명성이 개선될 경우 기부의향이 얼마나 고취되는지 로짓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부의향의 고취는 과거 기부경험이 없던 사람의 경우 얼마나 더 기부할 것인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연구는 과거 기부경험이 없었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내부중앙방식을 도입할 경우 각각 얼마만큼 기부의향이 존재하는지 비교하였다. 또한, 과거 기부경험이 있었던 대상을 상대로도 함께 비교한 결과를 아래의 Table 5에 나타냈다.

Table 5. 투명성 개선에 따른 기부의향 변화분석

본 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투명성이 개선되었을 때 기부자들이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Column(1)은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blockchain을 도입할 경우 기부의향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며 Columns(2)은 비기부자들을 대상으로 blockchain을 도입할 경우 기부의향을 나타냈다. 로짓분석의 표준오차는 각 응답자별 Clustering을 실시하였고 괄호안의 수는 z값을 의미한다. *은 10%미만에서 유의한 경우, **은 5%미만에서 유의한 경우, ***은 1% 미만에서 유의한 결과를 의미한다.

Logit model	(1) Donor	(2) Non-Donor
Transparency(blockchain)	0.281*** (2.69)	0.779*** (3.21)
Base knowledge level of blockchain	Yes	Yes
Demographic Controls	Yes	Yes
Response cluster	Yes	Yes
N	1,062	156
Pseudo R-sq	0.589	0.360

위의 결과는 내부중앙시스템을 활용하기 보다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기부의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비기부자들의 경우 기부자들에 비해 기부의향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새로운 기부자 그룹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4.4. 기부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투명성에 대한 기부금액은 기부대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연구에서는 각 시나리오에 따라 기부금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기부대상을 구분하여 세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유기견과 유기묘 보호소에 대한 후원, 두번째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 세번째는 환경보호단체에 대한 후원이다. 세가지 시나리오 중 정치인의 경우 권력이 존재하며, 후원금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이 존재했던 대상이다.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요구가 높은 만큼 다른 시나리오들에 비해 정치인에 대한 투명성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실제 분석결과 시나리오 2의 정치인에 대한 효과가 1.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투명성에 대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Table 6은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6. 블록체인 도입을 통한 시나리오분석

본 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투명성이 개선되었을 때 기부자들이 얼마나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각 Column들은 Scenario로 구분하였으며, (1)은 유기견 유기묘, (2)은 정치인, (3)은 환경보호단체에 대한 후원을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표준오차는 각 응답자별 Clustering을 실시하였고 괄호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한다. *은 10%미만에서 유의한 경우, **은 5%미만에서 유의한 경우, ***은 1%미만에서 유의한 결과를 의미한다.

Unit: 10,000 KRW	(1) Stray animals	(2) Politicians	(3) Climate change
blockchain	1.006**	1.415**	0.811**
	(2.57)	(2.43)	(2.25)
Base knowledge level of blockchain	Yes	Yes	Yes
Demographic Controls	Yes	Yes	Yes
Response cluster	Yes	Yes	Yes
N	444	456	462
adj. R-sq	0.075	0.124	0.179

위의 결과는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치인, 유기견 유기묘, 환경보호단체 순으로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인들의 경우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정치자금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블록체인이 아닌 내부중앙방식을 활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분석해봤다. 아래의 Table 7은 내부중앙방식을 도입하였을 경우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Table 7. 내부중앙방식 도입을 통한 시나리오분석

본 표는 내부중앙방식기술을 도입하여 투명성이 개선되었을 때 기부자들이 얼마나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각 Column들은 Scenario로 구분하였으며, (1)은 유기견 유기묘, (2)은 정치인, (3)은 환경보호단체에 대한 후원을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표준오차는 각 응답자별 Clustering을 실시하였고 괄호안의 수는 t값을 의미한다. *은 10%미만에서 유의한 경우, **은 5%미만에서 유의한 경우, ***은 1%미만에서 유의한 결과를 의미한다.

	(1) Stray animals	(2) Politicians	(3) Climate change
Center	0.616	0.120	0.514
	(1.61)	(0.15)	(1.61)
Base knowledge level of blockchain	Yes	Yes	Yes
Demographic Controls	Yes	Yes	Yes
Response cluster	Yes	Yes	Yes
N	444	456	462
adj. R-sq	0.052	0.084	0.177

분석결과, 내부중앙방식을 도입하였을 경우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금액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투명성개선을 통한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으로 인한 투명성 효과는 정치인과 같이 대상의 권력이 존재할 경우 혹은 대상이 전략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경우 더욱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최근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비영리기관의 목적은 사회혁신 등 추상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명성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나 그 중요성은 오히려 성과가 명확한 영리기관보다 더 크다. 비영리기관의 회계부정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효시가 되고 있다. 비영리기관과 같이 재정의 대부분을 기부금과 지원금을 통해 얻는 기관은 기관의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투명성 강화가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투명성 강화는 비영리기관의 기부금 모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비영리 기관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기부금을 통해 충당된다. 즉, 투명성 강화는 비영리 기관이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기술의 발전은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은 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 기관들은 자신의 연차보고서나 재정상태 그리고 활동내역 등을 온라인에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분명 투명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세부내역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최근 연구되고 있는 블록체인이 투명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기부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투명성에 있어 큰 장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과거연구들은 투명성 개선이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는 블록체인이 투명성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투명성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한다. 투명성의 가치를 고려하고 투명성 개선 기술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구는 투명성의 개선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금전적 연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기부금액 변화폭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개선으로 인한 투명성의 가치는 1.34만원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기부금액 대비 28%의 증가폭을 나타낸다. 특히 이러한 결과가 블록체인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인과 같은 후원에 있어 약 1만원의 후원액 증가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원대상이 정치인 등 권력을 행사하거나 전략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블록체인의 투명성 효과는 더욱 크다.

우리 연구는 투명성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와 실무적기여를 함께 하고 있다. 우선 학술적으로 블록체인과 투명성의 금전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실무적으로 비영리기관은 우리 연구를 이용 투명성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여 투명성에 드는 비용과 가치를 비교한 후 최적 투명성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투자 비용이 1천만원이라고 하자. 현재 기존 기부회원이 1만명이라고 하자. 우리연구에 의하면 블록체인이 1인당 1만원 이상의 기부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해당 기관은 블록체인에 투자를 해야한다. 사실 블록체인은 행정비용도 감소시킨다. 우리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기부자의 유입도 증가한다. 이를 감안하면 투자효과는 더 커진다.

우리 연구를 이용 기부자는 투명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본인이 관여하는 비영리 기관에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 당국의 경우 투명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과 기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기술의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 검증된 블록체인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투명성 관련 공시 의무나 각종 규

제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는 NPO 투명성의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NPO투명성의 외부효과는 중요하다. 어느 기관의 투명성 사건이 전체 NPO 생태계의 신뢰, 정당성, 규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파악한 투명성 가치는 실제 '사회적' 가치를 과소평가했다. 우리는 개별 기관의 직접적 가치를 측정하는데 일단 집중했다. 왜냐하면 전체가치를 직접적 가치와 사회적가치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직접적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이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는 NPO 투명성의 외부효과, 시스템 리스크를 정의하고 별도로 계산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Chang, C. T., & Lee, Y. K. (2009). Framing Charity Advertising: Influences of Message Framing, Image Valence, and Temporal Framing on a Charitable Appeal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12), 2910–2935.
- do Paço, A., Rodrigues, R. G., & Rodrigues, L. (2014). Branding in NGOs—its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Donate. *Economics & Sociology*, 7(3), 11.
- Michel, G., & Rieunier, S. (2012). Nonprofit brand image and typicality influences on charitable giving.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5(5), 701–707.
- Radley, A., & Kennedy, M. (1995). Charitable giving by individuals: A study of attitudes and practice. *Human relations*, 48(6), 685–709.
- Hans Peter Schmitzm, Paloma Raggo and Tosca Bruno–van Vijfeijken(2012). Accountability of Transnational NGOs: Aspiration vs Practic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012 41
- Bruce K. Behn, Delwyn D. DeVries, Jing Lin(2010). The determinants of transparency in nonprofit organization: An exploratory study. *Advances in Accounting, incorporating Advances in International Accounting*, 26(2010) 6–12
- Kathleen Hale(2013). Understanding nonprofit transparency: the limits of formal regulation in the American nonprofit sector. *Administration* 2013, 18(3)
- Stephanie Pankiw, Maureen Bourassa(2018). Transparency in the non–profit sector: Meaning and Inferences from the donor and non–profit perspective. *Marketing and Public policy conference proceedings*
- Robert O. Bothwell(2004). Trends In Self–Regulation And Transparency Of Nonprofits In The U.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ot–for–Profit Law – Volume 2, Issue 3*
- Gregory D. Saxton, Daniel G. Neely, Chao Guo(2014). Web disclosure and the market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J.Account.public policy* 33(2014) 127–144

- 강소현, & 최문섭. (2018). 블록체인과 기업지배구조. 재무관리연구, 35(4), 213-237.
- 김가을, 조상미. (2014). 한국 모금기관의 투명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0(0), 27-52.
- 김성호, 안명아, 구엔 반 안, 구엔 투옹 타오. (2015). 비영리기관(NPO)의 진정성과 투명성이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4(2): 3-22
- 김원희, 남혜정, 전규안, 정창모, & 송옥렬. (2013).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의 역할. 회계저널, 22(3), 159-197.
- 김정숙, 문명재. (2015). 국제개발 비영리조직의 역량과 재정투명성이 재정지원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26(3), 51-81.
- 강철희, & 양진욱. (2008). 비영리기관 온라인 기부 증액자의 기부 증액행동에 관한 연구-정기기부자의 증액빈도 예측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7, 169-207.
- 김해룡, & 박민수. (2013). 비영리기관 후원모금 전략: 기부지역에 따른 공간적 거리감과 기부 메시지 해석수준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4(4), 105-120.
- 김준희. (2009). 비영리기관 후원자의 관계지속의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8), 324-332.
- 박원, 강내철. (2015). 회계투명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0(3): 21-49
- 박원순. (2004). [사례연구] 비영리단체의 재정 투명성-아름다운 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3, 173-193.
- 박현준, 신현한, 강동관, 권인수 (2006), "기업 투명성과 기업 가치," 경영학연구, 35(5), 1361-1391.
- 성승제. (2017).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31(2), 325-352.
- 이동영, 변은지. (2007).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 자산 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303-325.
- 이정아, 김근식, & 윤옥화. (2014).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자치행정학 보, 28(4), 559-578.
- 이현주, 윤나영, 박소영, & 황성식. (2019). 블록체인 기반의 회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28(2), 273-300.

부록

Table A1. 중앙방식과 블록체인 방식에 따른 기부방향 차이

본 표는 투명성관련지표를 내부중앙시스템에 기록할 경우와 블록체인에 기록할 경우 응답자들의 기부방향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자료이다. Difference는 중앙방식의 평균과 블록체인방식의 평균차이를 나타낸다. *은 10% 미만에서, **은 5%미만에서, ***은 1%미만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No. Obs.	Mean	Std. Err	Difference (a) - (b)	t-value
내부중앙방식 (a)	620	0.645	0.019	-0.061	-3.414***
블록체인방식 (b)	620	0.706	0.018		

Table A2. 중앙방식과 블록체인에 따른 기부금액 조사

본 표는 투명성관련지표를 내부중앙시스템에 기록할 경우와 블록체인에 기록할 경우 응답자들의 기부금액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자료이다. Difference는 중앙방식의 평균과 블록체인방식의 평균차이를 나타낸다. *은 10% 미만에서, **은 5%미만에서, ***은 1%미만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No. Obs.	Mean	Std. Err	Difference (a) - (b)	t-value
내부중앙방식 (a)	356	1,998	0.128	-0.316	-4.723
블록체인방식 (b)	356	2,314	0.141		

Table A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본 표는 기부단체 투명성의 중요도와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도, 블록체인 사용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요인적재량은 요인분석의 베리맥스 회전시 적재량을 나타냈으며, 적재량이 0.3미만의 경우 삭제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를 산출한 값을 나타내었다.

	문항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신뢰도
기부단체 투명성의 중요도	A1_n3	0.884	0.781	1,922	0,807
	A1_n4	0.936	0.876		
	A1_n5	0.516	0.266		
	A1	삭제			
	A1_n2				
	A1_n6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도	D1_1	0.846	0.716	5,639	0,967
	D1_1_n2	0.880	0.775		
	D1_1_n3	0.918	0.844		
	D1_1_n4	0.922	0.850		
	D1_1_n5	0.926	0.858		
	D1_1_n6	0.909	0.826		
	D1_1_n7	0.879	0.772		
블록체인 사용 기관에 대한 신뢰도	D1_2	0.865	0.748	4,619	0,951
	D1_2_n2	0.924	0.854		
	D1_2_n3	0.908	0.824		
	D1_2_n4	0.748	0.559		
	D1_2_n5	0.904	0.817		
	D1_2_n6	0.904	0.817		

Table A4. 내부중앙시스템 활용 시 기부의향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본 표는 내부중앙시스템 활용 시 기부의향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기부단체 투명성 중요도,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도, 블록체인사용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table 5를 이용하여 만든 요인이며,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는 7점척도이다. 직업과 지역, 학력, 종교, 소득수준, 결혼여부, 자녀여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은 10% 미만에서, **은 5%미만에서, ***은 1%미만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 내부중앙시스템 도입 시 기부 의향				
	Coef.	Std. Err.	Z value	P value
기부단체 투명성 중요도	0.275***	0.094	2.930	0.003
직업				
학생	1.399***	0.474	2.950	0.003
회사원	0.993***	0.304	3.270	0.001
공무원	1.804***	0.566	3.190	0.001
전문직	1.154***	0.436	2.650	0.008
자영업	1.050**	0.414	2.540	0.011
기타	0.792**	0.357	2.220	0.026
지역				
부산	-0.443	0.369	-1.200	0.229
대구	-0.186	0.489	-0.380	0.703
인천	0.603	0.443	1.360	0.174
광주	0.228	0.581	0.390	0.695
대전	0.023	0.580	0.040	0.969
울산	-0.138	0.660	-0.210	0.835
경기	-0.286	0.252	-1.130	0.257
강원	-0.134	0.592	-0.230	0.821
충북	-0.737	0.474	-1.550	0.120
충남	-0.786	0.590	-1.330	0.183

전북	-0.274	0.585	-0.470	0.640
전남	-0.409	0.675	-0.610	0.545
경북	-0.271	0.521	-0.520	0.602
경남	0.741	0.510	1.450	0.146
제주	-0.367	1.227	-0.300	0.765
세종	-1.219	0.901	-1.350	0.176
학력				
고등학교 졸업	0.626*	0.339	1.850	0.065
대학교 졸업	0.413	0.273	1.510	0.130
종교여부(없음)	-0.088	0.189	-0.470	0.641
소득수준				
월 200만원 미만	0.400	0.298	1.340	0.179
월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0.063	0.310	0.200	0.840
월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0.164	0.335	0.490	0.624
월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0.050	0.371	-0.130	0.894
월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0.362	0.462	0.780	0.433
월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0.265	0.478	-0.550	0.580
월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0.001	0.692	0.000	0.999
월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0.673	0.684	0.980	0.325
월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0.976	0.669	1.460	0.145
결혼여부				
기혼	-0.772*	0.397	-1.940	0.052
별거/이혼/사별	-0.819	0.587	-1.400	0.163
자녀여부(없음)	-0.694*	0.381	-1.820	0.069
상수항	0.123	0.590	0.210	0.834

Table A5. 블록체인 도입 시 기부방향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본 표는 블록체인 도입 시 기부방향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부단체 투명성 중요도,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도, 블록체인사용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table 5를 이용하여 만든 요인이며,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는 7점척도이다. 직업과 지역, 학력, 종교, 소득수준, 결혼여부, 자녀여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은 10% 미만에서, **은 5%미만에서, ***은 1%미만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 블록체인 도입 시 기부 의향				
	Coef.	Std. Err.	Z value	P value
기부단체 투명성 중요도	0.375***	0.112	3.340	0.001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도	0.555**	0.249	2.230	0.026
블록체인 사용기관에 대한 신뢰도	0.881***	0.260	3.390	0.001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0.012	0.073	-0.160	0.874
직업				
학생	0.575	0.554	1.040	0.299
회사원	0.189	0.368	0.510	0.607
공무원	0.317	0.612	0.520	0.604
전문직	0.691	0.537	1.290	0.198
자영업	0.362	0.507	0.710	0.476
기타	0.404	0.440	0.920	0.358
지역				
부산	-0.354	0.441	-0.800	0.422
대구	-0.852	0.562	-1.520	0.129
인천	1.240**	0.620	2.000	0.045
광주	0.204	0.584	0.350	0.727
대전	0.268	0.791	0.340	0.735
울산	1.629*	0.865	1.880	0.060
경기	0.199	0.290	0.690	0.493
강원	0.520	0.651	0.800	0.425

충북	0.343	0.701	0.490	0.625
충남	-0.454	0.650	-0.700	0.485
전북	-0.395	0.600	-0.660	0.511
전남	0.807	1.555	0.520	0.604
경북	0.791	0.679	1.160	0.244
경남	0.496	0.586	0.850	0.397
세종	-0.641	1.214	-0.530	0.598
학력				
고등학교 졸업	0.115	0.393	0.290	0.770
대학교 졸업	0.420	0.330	1.270	0.204
종교여부(없음)	-0.105	0.241	-0.430	0.664
소득수준				
월 200만원 미만	-0.104	0.371	-0.280	0.780
월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0.114	0.378	-0.300	0.763
월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0.363	0.422	-0.860	0.390
월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0.349	0.454	-0.770	0.442
월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0.166	0.569	0.290	0.771
월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0.211	0.694	-0.300	0.761
월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0.633	0.664	-0.950	0.340
월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0.555	0.602	0.920	0.357
월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0.238	0.727	0.330	0.743
결혼여부				
기혼	0.106	0.795	0.130	0.894
별거/이혼/사별	-0.071	0.574	-0.120	0.901
자녀여부(없음)	0.214	0.581	0.370	0.713
상수항	0.619	0.780	0.790	0.427

연구 2 | 비영리단체(NPO)의 투명성과 기술혁신에 대한 뇌인지과학적 판단

1. 서론 & 선행연구

사람들이 기부와 같은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뇌에서는 어떻게 가치를 계산할까? 기부 의사결정과 같은 사회적 의사결정의 경우 계산해야 하는 정보나 가치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복잡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기부 대상의 안녕을 생각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의 경우 음식이나 물과 같은 물리적 가치나 돈과 같은 경제적 가치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기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정보들을 계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뇌인지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기부 의사결정의 신경 기제를 살펴본 초기 fMRI 연구들에서는 복내측 전전두엽(VMPFC;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과 복측 선조체(ventral striatum) 등의 보상 또는 가치와 관련된 영역 활성화됨을 밝힌 바 있다 (Moll et al., 2006; Harbaugh, Mayr, & Burghart, 2007). 이러한 초기 기부 의사결정의 신경과학 연구들이 진행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추상적인 사회적 가치와 다른 물리적 가치들이 모두 비슷한 영역에서 처리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Izuma, Saito, & Sadato, 2008; Lin, Adolph, & Rangel, 2011; Wake & Izuma, 2017). 이처럼 추상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가치도 최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우리의 뇌 안에서 결국에 하나의 가치 척도로 환산되어 계산된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공통 화폐’ 시스템이라는 관점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Levy & Glimcher, 2012; Ruff & Fehr, 2014).

최근에는 더욱 더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해, 복내측 전전두엽이나 복측 선조체 등 가치 계산과 관련된 뇌 영역들이 공감(empathy)이나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 등의 사회인지 관련 뇌 영역들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전달받아 통합적인 가치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Ashar, Andrews-Hanna, Dimidjian, & Wager, 2017; Hare, Camerer, Knoepfle, O’ Doherty, & Rangel, 2010; Tusche, Bockler, Kanske, Trautwein, & Singer, 2016). 예를 들어, Tusche 등(2016)의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기반의 다변량 패턴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기부 의사결정을 할 때 전측 섬엽(anterior insula; AI)에서는 정서적 공감 정보를 코딩하며, 전두-두정 접합부(temporoparietal junction; TPJ)에서는 조망수용 정보를 코딩한다는 것을 밝혔다. 더 나아가, 가장 최근의 Ashar 등(2017)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공감 고통(empathic distress)과 공감 걱정(empathic care) 강도를 fMRI 신경 활성화 패턴만으로 예측하는 신경 마커를 개발하여, 이러한 마커들이 기부 의사결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부 의사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신경 메커니즘은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감이나 조망수용 등 사회인지 과정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기부를 받는 기관이나 기부 대상의 특성에 대해 신경기제를 알아본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실제 기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명성이라는 요인을 신경기제와 함께 알아본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같이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신경 기제와 함께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기존까지의 기부 의사결정의 신경 기제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fMRI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MRI는 신경 세포의 활성화에 따른 뇌 혈류량 변화를 측정하여, 특정한 과제 수행시의 뇌 신경 활동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대표적인 뇌영상 기술이다. 이처럼 fMRI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뇌인지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스캐너 안에서만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한된 스캐너 공간 안에서 움직임 없이 고정된 자세를 지속하기 어려운 집단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보다 자연스러운 일상적 상황에 대한 연구는 fMRI 만으로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뇌인지과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fNIRS(기능적 근적외분광법,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의 경우, 이러한 fMRI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뇌 신경활동 측정 도구이다. fNIRS는 피부를 통과할 수 있는 두 종류 파장의 근적외광을 이용하여 뇌의 신경 활동에 따른 혈류 내 산화 헤모글로빈(oxyhemoglobin)과 환원 헤모글로빈(deoxyhemoglobin)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비침습적인 뇌영상 기술이다. fNIRS는 머리에 장착하는 형태로 움직임에 견고하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 세팅과 인구군에서 뇌 기능을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fMRI로는 연구하기 어려운 보다 자연스러운 실험 상황이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경경제학, 혹은 뉴로마케팅, 소비자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fNIRS를 활용하여 인간의 의사결정을 연구하고 있다 (Cakir, Cakar, Giriskan, & Yurdakul, 2018; Kopton & Kenning, 2014; Krampe, Gier, & Kenning, 2018; Krampe, Strelow, Haas, & Kenning, 2018; Meyerding & Mehlhose, 2018). fMRI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 상황을 연구하는 데에 제약이 적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fNIRS의 장점을 활용하여, 물건 구매와 같은 소비자 의사결정을 연구해 왔다. 예를 들어, Cakir 등(2018)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물건을 구매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시킬 때 fNIRS 데이터를 측정된 뒤, 이때의 fNIRS 측정치를 이용하여 각 물건들에 대한 구매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기부 의사결정에서 기관의 투명성이라는 요인을 주관적 가치 척도로 환산하여 알아볼 수 있는 의사결정 실험 패러다임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fNIRS를 이용하여 전두엽 영역들의 신경 활성화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기관의 투명성 가치를 통합하여 기부 의사결정을 내릴 때의 신경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치 계산이나 정보 통합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의 신경 신호를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사람들이 기부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기부 대상의 특성이나 기관의 투명성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할 때 관여하는 뇌 영역을 찾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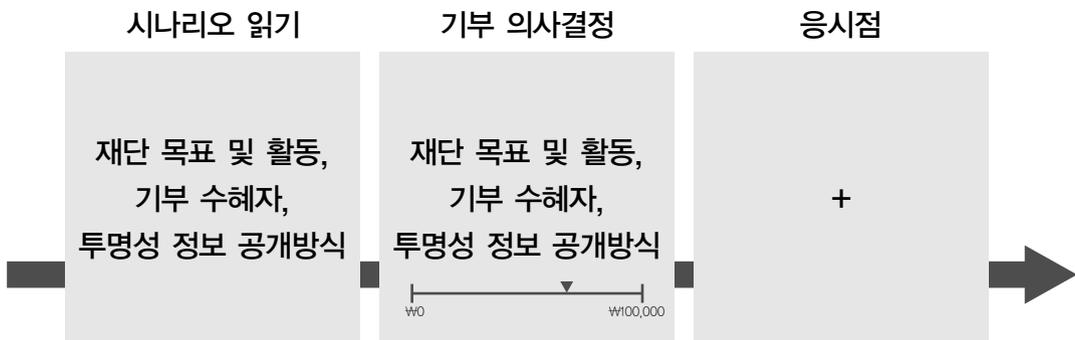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22명 (남자 14명, 여자 8명, 평균 나이 = 24.28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정상 나안 혹은 교정시력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가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참가 보상으로는 시간 당 10,000원의 보상이 지급되었다. 이중 fNIRS 데이터의 경우 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1명의 데이터가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21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 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실험실에 방문하여,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뒤, fNIRS 기기를 착용한 후 기부 의사결정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 참여자들은 매 시행 가상의 비영리기관의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각 기관에 대해 얼마 정도의 금액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를 최대 10만원까지 응답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이 개별 시나리오들을 읽는 최소한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10초 이후부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은 크게 비영리기관의 기술 혁신(2 수준: 내부 중앙 시스템, 블록체인)과 기부 대상(3 수준: 정치인, 유기견·유기묘 보호소, 환경보호단체)의 2×3 참가자 내 실험 설계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총 6개의 조건에 대해 각각 9개의 구체적인 기부금 모금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며, 각 시나리오에는 해당 비영리기관의 목표 및 활동, 기부 대상, 투명성 관련 지표의 공개 방식을 포함하였다. 모든 실험 절차는 PsychoP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추가적으로, 각 참가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본 실험을 시작하기 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동영상을 동일하게 시청한 후 의사결정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절차 도식. 비영리기관의 모금정보에 대해 시나리오를 읽고 기부 의향을 선택함〉

실험 장비

본 연구에서는 NIRSIT (OBELAB inc., Seoul, Korea) 기기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전두엽 영역의 fNIRS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NIRSIT 기기는 근적외선을 방출하는 광원과 근적외선을 탐지하는 센서가 간격에 따라 총 204 쌍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광원과 센서 간의 간격이 3 cm인 48개 쌍에서 측정된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fNIRS 데이터 분석

fNIRS 데이터의 전처리와 통계 분석은 MATLAB의 SPM-fNIRS 툴박스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NIRSIT 장비를 통해 측정된 780 nm와 850 nm 파장 신호를 광학 밀도 신호로 변환한 후, 수정된 Beer-Lambert 법칙을 이용하여 각 채널 별 산화 헤모글로빈과 환원 헤모글로빈의 농도 변화를 계산하였다. 헤모글로빈 농도 변화의 시계열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에서 움직임과 관련된 잡음이나 생리적 신호와 관련된 잡음을 제거하는 단계와 시간적 필터링 단계를 거쳐 변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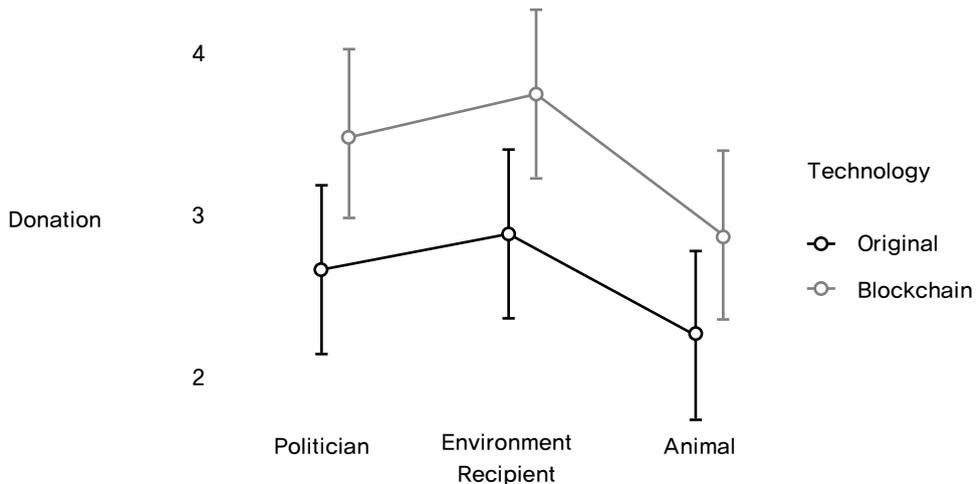
fNIRS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전처리를 마친 각 참가자들의 데이터에 대해 일반화 선형 모형(GLM; General Linear Model)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참가자들의 산화 헤모글로빈 농도의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기술 혁신(내부 중앙 시스템, 블록체인)과 기부 대상(정치인, 유기견·유기묘 보호소, 환경보호단체)의 총 6가지 종류의 시행들에 혈류 역학 반응 함수를 컨볼루션 시킨 시계열 각각을 회귀자(regressor)로 갖는 GLM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개별 참가자들마다 각 조건 별 베타 추정치들 간의 차이를 계산한 후, 이를 집단 수준에서 통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특정 조건에서 활성화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채널을 찾고자 하였다.

3. 분석 결과

행동 결과

행동 데이터의 경우 가장 먼저 개별 참가자의 각 조건 별 평균 기부 금액을 계산한 후, 이 데이터에 대해 기술 혁신(2 수준: 내부 중앙 시스템, 블록체인)과 기부 대상(3 수준: 정치인, 유기견·유기묘 보호소, 환경보호단체) 간의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혁신 방법에 따라 평균 기부 금액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 ($F(1, 21) = 15.197, p < .001$) 즉, 내부 중앙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성 지표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할 때에 비해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당 정보들을 관리할 때, 사람들의 기부 의향 정도가 높아졌다 (그림 2).

반면, 기부 대상에 따른 기부 금액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F(2, 42) = 1.835, p = 0.172$), 기술 혁신과 기부 대상 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F(2, 42) = 0.791, p = 0.460$). 즉, 본 의사결정 과제에서 기부 대상(정치인, 유기견·유기묘 보호소, 환경보호단체)에 따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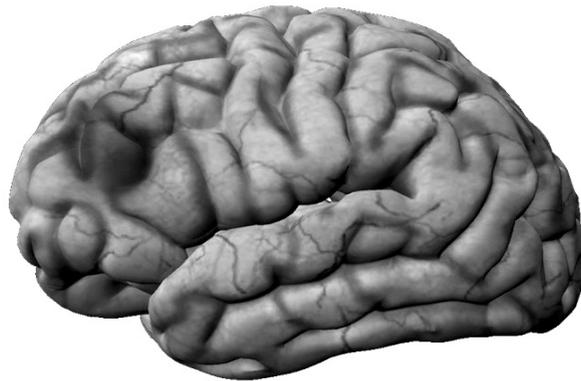


〈그림 2. 기부대상과 기부방식에 따른 기부 의사결정 차이〉

fNIRS 결과

행동 데이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기술 혁신에 따른 기부 의사결정 차이에 기저하는 신경 기제를 알아보기 위해, fNIRS 데이터에서 해당 조건 간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영역을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내부 중앙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성 정보를 공개하는 비영리기관의 시나리오를 읽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비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는 기관의 시나리오를 읽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 활성화되는 영역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분석 결과, 좌측 복외측 전전두엽(VLPFC; ventrolateral prefrontal cortex)에서 내부 중앙시스템 조건에서보다 블록체인 조건에서 의사결정 시 활성화 수준이 유의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이는 좌측 복외측 전전두엽에서 기존 방식인 내부 중앙시스템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혁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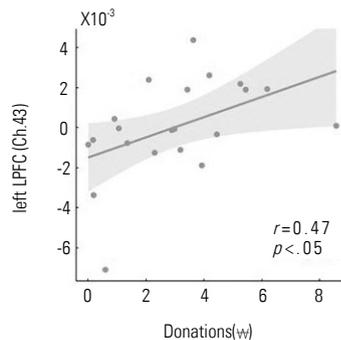
〈그림 3. fNIRS 결과 - 내부중앙시스템 조건에 비해 블록체인 조건에서 좌측 복외측 전전두엽의 유의미한 활성화 증가가 관찰됨〉

fNIRS 활성화 개인차 분석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 중 하나인 뇌인지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기부 의사결정의 정량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연구참여자들의 기부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fNIRS 측정치와 연관지어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개별 연구참여자들이 본 의사결정 과제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부를 하는지,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이 특정 조건의 시나리오에 대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부를 하는지 그 정도를 계산하였다. 이후, 이러한 기부 의향의 개인차를 참가자들이 본 실험에서 비영리기관의 모금 시나리오를 읽는 동안 fNIRS를 통해 측정된 뇌 활성화 정도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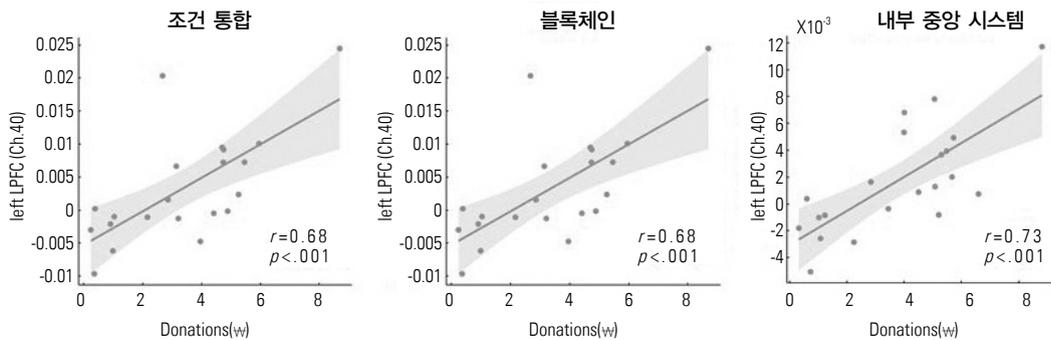
분석 결과, 블록체인 조건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기부 금액의 정도와 블록체인 조건의 시나리오를 처리할 때의 43번 채널(DLPFC;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의 활성화 수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0.47, p < .05$). 즉, 블록체인 조건의 시나리오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의 기부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일 수록, 해당 조건의 시나리오를 읽을 때에 DLPFC 영역의 활성화 수준이 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그림 4).



〈그림 4. fNIRS활성화 수준과 기부 의사결정 금액간의 상관그래프. DLPFC 전두엽의 활성화 수준과 블록체인 조건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기부 금액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 발견됨〉

또한, 조건과 상관 없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금액의 기부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일 수록, 전반적으로

40번 채널(VLPFC)의 활성화가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r = 0.53, p < .05$). 이 영역의 활성화 신호의 경우, 블록체인 조건($r = 0.53, p < .05$)과 내부 중앙시스템 조건($r = 0.73, p < .001$) 모두에서 각 조건에서의 기부 의사결정 금액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해당 채널 신호의 경우 조건과 상관 없이 전반적인 기부 의사결정의 정도를 따라 활성화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fNIRS 활성화 수준과 기부 의사결정 금액간의 상관그래프.〉

1) 조건통합: 좌측측두엽 (채널 40)영역은 기부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활성화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기부 의사결정 금액이 높음. 기부 방식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각각 2) 블록체인 3) 내부중앙시스템 전전두엽의 활성화 수준과 의사결정을 내린 기부 금액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 발견됨)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이 증진되었을 때 사람들의 기부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뇌에서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fNIRS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과 같이 기관의 내부 중앙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성 지표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할 때에 비해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당 정보들을 공개할 때, 사람들의 기부 의사결정 금액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혁신을 통한 투명성

증진이라는 정보가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부 중앙시스템 조건에 비해 블록체인 조건에서 뇌 활성화 정도가 더 올라간 영역을 탐색하였다. 실험 결과, 좌측 복외측 전전두엽(VLPFC) 영역의 뇌 활성화 수준이 블록체인 조건에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각 참가자들의 기부 의사결정 경향성과 상관을 보이는 영역을 밝힘으로써, fNIRS 측정치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부 의사결정의 개인차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부 의사결정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인지된 투명성요인은 기부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가치 척도로도 환산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기능적 신경영상기법을 이용하여 투명성 정보에 대뇌신경반응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의미한 활성화를 증진시킴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인간의 고차원적 인지행동의 목표적합성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알려진 전전두엽 영역의 활성화가 기술혁신을 통한 투명성이 보장된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유도됨을 밝혔다. 뇌신경활성화 정도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부의향 (예, 기부의도 금액)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점은 특정 뇌영역의 활성화 패턴이 기부 의사결정 성향 혹은 행위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표지자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Ashar, Y. K., Andrews-Hanna, J. R., Dimidjian, S., & Wager, T. D. (2017). Empathic care and distress: predictive brain markers and dissociable brain systems. *Neuron*, 94(6), 1263–1273.
- Cakir, M. P., Çakar, T., Giriskan, Y., & Yurdakul, D. (2018). An investigation of the neural correlates of purchase behavior through fNIR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52(1/2), 224–243.
- Hare, T. A., Camerer, C. F., Knopfle, D. T., O’Doherty, J. P., & Rangel, A. (2010). Value computations in ventral medial prefrontal cortex during charitable decision making incorporate input from regions involved in social cognition. *Journal of Neuroscience*, 30(2), 583–590.
- Izuma, K., Saito, D. N., & Sadato, N. (2008). Processing of social and monetary rewards in the human striatum. *Neuron*, 58(2), 284–294.
- Kopton, I. M., & Kenning, P. (2014). 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 as a new tool for neuroeconomic research.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8, 549.
- Krampe, C., Gier, N. R., & Kenning, D. (2018). The application of Mobile fNIRS in Marketing Research – Detecting the ‘First-Choice-Brand’ Effect.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12, 433.
- Krampe, C., Strelow, E., Haas, A., & Kenning, P. (2018). The application of mobile fNIRS to “shopper neuroscience” – first insights from a merchandising communication study.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52(1/2), 244–259.
- Levy, D. J., & Glimcher, P. W. (2012). The root of all value: a neural common currency for choice. *Current opinion in neurobiology*, 22(6), 1027–1038.
- Lin, A., Adolphs, R., & Rangel, A. (2011). Social and monetary reward learning engage overlapping neural substrates.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7(3), 274–281.
- Meyerding, S. G., & Mehlhose, C. M. (2018). Can neuromarketing add value to the traditional marketing research? An exemplary experiment with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fNIR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 Moll, J., Krueger, F., Zahn, R., Pardini, M., de Oliveira-Souza, R., & Grafman, J. (2006). Human fronto-mesolimbic networks guide decisions about charitable don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3(42), 15623–15628.

- Murray, E. A., & Rudebeck, P. H. (2018). Specializations for reward-guided decision-making in the primate ventral prefrontal cortex.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9(7), 404.
- Rudebeck, P. H., Saunders, R. C., Lundgren, D. A., & Murray, E. A. (2017). Specialized representations of value in the orbital and ventrolateral prefrontal cortex: desirability versus availability of outcomes. *Neuron*, 95(5), 1208–1220.
- Ruff, C. C., & Fehr, E. (2014). The neurobiology of rewards and values in social decision making.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5(8), 549.
- Tusche, A., Bockler, A., Kanske, P., Trautwein, F.-M., & Singer, T. (2016). Decoding the charitable brain: Empathy, perspective taking, and attention shifts differentially predict altruistic giving. *Journal of Neuroscience*, 36(17), 4719–4732.
- Harbaugh, W. T., Mayr, U., & Burghart, D. R. (2007). Neural responses to taxation and voluntary giving reveal motives for charitable donations. *Science*, 316(5831), 1622–1625.
- Wake, S. J., & Izuma, K. (2017). A common neural code for social and monetary rewards in the human striatum.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2(10), 1558–1564.

2019년
기획연구
보고서

Part.2

계획기부도입을 위한 소득세제 연구

서희열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명예교수 / 경영학박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창규 | (사)한국기술거래사회 팀장 / 법학박사



책임연구자



서희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사)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학력

경영학 박사

주요경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연구실적

우리나라의 세제 평가의 개편방향의 20여편

공동연구자



이창규

(사)한국기술거래사회 팀장

학력

법학박사

주요경력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주)인텔리콘연구소 연구원

연구실적

수익권의 복층화에 따른 과세제도 연구외 10여편

계획기부도입을 위한 소득세제 연구

서희열(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명예교수 / 경영학박사)

이창규((사)한국기술거래사회 팀장 / 법학박사)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기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기부제도의 수정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다. 이에 2019년 8월 29일에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에서도 보건·복지·고용예산은 2019년 160조 9천 972억 원에서 2020년 181조 5천 703억 원으로 12.8%나 증가하였다.¹⁾

중요한 점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 부분(공익 단체)의 재정 확보에 관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분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기부행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부행위가 활성화된다면 국가의 사회복지 역할 및 재정 부담을 보완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이 계속 이뤄졌고, 실제로 기부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²⁾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2019년 8월 29일자.

2) 임동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KERI Insight 19-03」, 한국경제연구원, 2019, 1면.

기부문화가 상대적으로 정착이 잘된 국가들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회적인 단순한 기부행위 보다 장기적인 준비를 거쳐 실행에 옮겨지는 계획기부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 또한, 기부금의 모집단계부터 사용·운용·사후관리와 정부 지원제도까지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계획기부의 활성화나 제도의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계획기부의 활성화와 계획기부의 일종인 기부연금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다.³⁾

우리나라의 계획기부는 유산기부 및 개인재단 등을 위주로 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 단계 측면이나 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다양한 형태의 기부 및 계획기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잠재적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내에도 기부문화 활성화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계획기부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회적이고 단순한 현금 지급 형태의 기부 보다 계획기부를 통해 기부자는 기부행위에 더욱 주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하여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계획기부의 활성화는 민간 기부 규모의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다. 물론 계획기부에 따른 세제상 혜택은 재정 수입의 일정한 감소와 조세회피의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계획기부 제도는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⁴⁾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계획기부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몇몇 이슈를 논하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우선 계획기부를 개관한다(이하, “I”). 특히 계획기부의 개념, 혜택, 종류를 차례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을 알아본다. 이후 소규모 민간 비영리 단체(NPO)의 계획기부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살핀다(이하, “II”). 이 영역에서는 저명한 계획기부와 관련한 문헌을 중심으로 계획기부의 특성과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로서 텍사스 감리교 재단을 소개함과 동시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 후에 계획기부의 도입을 위한 세제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이하, “III”). 이 영역에서는 기부금 관련 세제에서의 이슈와 개선 방향을 검토한 뒤 세제에서의 지원 강화 방안을 알아본다. 이후 계획기부의 도입 방안으로서 기부연금의 세제상 검토와 동시에 자선잔여신탁(CRT)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시한다.

3) 이상우, “국회, 기부연금제도 입법 추진”, 『kiri 교령화 리뷰』, 보현연구원, 2016, 13~14면.

4) 교육부, 「기부금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재원 다변화 및 교육신탁기금 운영 연구」, 2015, 2면.

2. 선행연구의 검토

약 10년여전부터 계획기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⁵⁾

1) 선행연구의 분석

〈표 1〉 계획기부의 선행연구 목록

순번	연구명	저자명	발행일	발행처
①	계획기부 개념과 발전현황에 관한 기본연구	강철희	2010.7	아름다운재단
②	계획기부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오준석	2010.7	아름다운재단
③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상신·박 훈	2010.7	아름다운재단
④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계획기부 연구	오준석·이상신	2012.03	아름다운재단

먼저 ①번 연구는 거대한 부의 이전, 부유층 인구의 고령화, 신흥 부유층 등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문화의 성장이라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등장한 거대한 부는 향후 다음 세대로 거대한 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요 수혜자는 가족과 친척 등의 상속자(heirs), 자선단체, 그리고 세입을 통한 정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많은 NPO가 이러한 자원 시장(resource market)에 주목하고 있으며, 계획기부(Planned Giving)라는 새로운 방식의 모금 상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 해외 주요국의 계획기부 제도의 검토를 통해 국내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②번 연구는 계획기부를 하나의 사업(business)이라고 설정하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시장개념(market concept)에 입각한 계획기부상품을 설계하였다. 특히 계획기부 시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성장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5) 아름다운 재단의 계획기부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고 바람,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s=계획기부>〉 (최종방문일 2019년 10월 7일).

③번 연구는 기부의 여러 형태 중 계획기부가 기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참조하여 계획기부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여 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하였다.

④번 연구는 계획기부상품을 소개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기부상품이 시장성을 갖추기 위한 환경요건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계획기부상품이 어떻게 활용되며,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계획기부상품 및 제도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선행연구는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II. 계획기부의 개관”에서는 기부자의 혜택과 공익단체에 대한 혜택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신 기부 현황을 국세통계연보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III. 소규모 민간 비영리 단체(NPO)의 계획기부의 도입 가능성”을 논하였다. 특히 “Planned Giving for Small Nonprofits, Ronald R. Jordan and Katelyn L. Quynn,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2002”의 핵심적인 내용을 도출하여 소규모 민간 비영리 단체(NPO)에 대한 계획기부 구체적인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IV.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세제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부금 관련 세제에서의 이슈로서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을 비교하였으며, 계획기부 도입 방안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기부연금의 세제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자산잔여신탁(CRT)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II. 계획기부의 개관

1. 계획기부의 개요

1) 개념

계획기부(planned giving)란 개인자산 관리·운용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생전에 유언 등의 법적 계약 때문에 지정된 민간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이하 “NPO”로 지칭함) 또는 법적 수혜자에게 평생 혹은 그 사망 시에 자산이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기부는 계획된 기부(planned gift)로서 그 조달에 관한 개념과 여러 활동을 총칭하여 계획기부(planned giving)라고 부르고 있다.⁶⁾

계획기부는 기부 실행에 따른 세제 혜택도 계약 후 내용이 변경이 가능 혹은 불가능 여부에 따라 “직접 기부(outright gift)”, “내용변경 가능기부(revocable gift)”, “내용변경 불가기부(irrevocable gift)”로 나뉜다. 직접 기부(outright gift)는 가치가 하락한 주식을 NPO에 생전 기부하고, 소득 공제와 함께 액면가액의 차이를 자본 손실로 계상하는 것이다. 내용변경 불가기부(irrevocable gift)는 신탁을 설정하고 기부자의 사망과 동시에 잔여 재산이 NPO에 기부하는 것으로서 공익 연금형 기부(charitable remainder trust)가 있다.⁷⁾

미국의 공익 신탁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Tax Reform Act of 1969등의 세법의 개정으로 사익과 공익을 포함한 구조로 제도화되었다. 예를 들어 공익 잔여재산 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s)은 기부자가 사망할 때까지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자 또는 법적 지정자가 고정 연금액 또는 재산의 일정 비율을 신탁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다. 공익 연금형 기부는 반대로 기부자의 생전 비영리법인에 기부를 정기적 이행하고, 잔여 금액을 법정 상속인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계획기부는 세제상의 혜택과 생전에

6) Katherine Swank, Michael Quevli, “Prospect Research for Planned Gifts: Using Predictive Donor Profiles, Wealth, and Asset Screenings to Identify High-End Planned Gift Prospects”, blackbaud, 2011, at 1-2.

7) David N. Barkhausen, The Role of Life Insurance in Enabling Large, Low Cost Charitable Gifts, Life Insurance Advisors, Inc., 2002, at 3-4.

배당을 받는 수익구조는 퇴직 후의 생활 설계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자산 운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⁸⁾

계획기부의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35년 제임스 스미슨(James Smithson)의 유족이 그 유산을 연방 정부에 기증한 결과, 스미소니언 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가 설립되었다. 이후 연방 의회가 소득세와 상속세의 우대 제도를 마련한 배경으로 1960년대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설립 기금을 졸업생의 계획기부를 통해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이 설립된 성공사례를 의회에 보고하고 다른 고등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의 계획기부로 설립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⁹⁾

〈그림 1〉 제임스 스미슨과 스미소니언 연구소 전경



출처 : 스미소니언 재단 홈페이지 (<https://siarchives.si.edu/history/featured-topics/smithson-smithsonian/who-was-james-smithson>).

이러한 기부는 기존 기부자의 생전 유서 등의 법적 계약으로 설정된 당사자의 사후에 실제 기부로 발생

8) 강철희, 「계획기부 개념과 발전현황에 관한 기본연구」, 아름다운재단, 2010.7, 9면.

9) R.S. CLARKE ET AL., Meteorites and the Smithsonian Institution, Geological Society London Special Publications 256(1), January 2006, at 238-239.

하는 것에서 거치 기부(deferred gift)라고도 불리어왔다. 하지만 가장 큰 전환기는 Tax Reform Act of 1969의 시행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계약을 설정한 시점에서 기부자와 위탁자가 세제 혜택을 얻고 연금 등의 형태로 생전에 정기적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장기적인 자본 이득 등의 과세 회피가 가능한 현대 공익 연금형 기부가 제도화된 것이다. 이는 일반인이 개인 재산의 계획적 관리로 인식하게 되면서, 1970년에는 계획기부를 조달하는 활동 마저 계획기부로 총괄하여 일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전환기는 1980년대 중반 금융기관이나 금융 플래너가 고객의 자산 운용 방법의 하나로 권장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피델리 투자(Fidelity Investment)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 IRC) 501(c)(3)에 따라 비영리 펀드를 설정하기 시작하였다.¹⁰⁾

기부자 조언 기금(donor advised fund) 관리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영리 금융기관의 계획기부 분야 진출이 활발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공익 연금형 기부(Charitable Gift Annuity)에서 발생하는 생전 배당 수익구조를 은퇴 생활 설계로 열심히 추천한 결과, 1990년대에는 40~50세대의 사람들 계획기부를 설정할 수가 급증하였다. 현재의 계획기부가 자산계획의 개념에 기반을 둔 자산선물계획(charitable gift planning)이라고 불리게 된 까닭이다.¹¹⁾

2) 혜택

(1) 기부자에 대한 혜택

계획기부는 기부금에 대한 신탁 방식의 자산관리 및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설정하여 사용 목적이나 시기 등을 통제할 수 있다. 가령, 공익 연금형 기부와 같은 복잡한 절차·관리 및 고액의 양도 자산이 필요로 하는 종류도 있는 반면에 유서 기부 지정 등 생전에 결정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기부자에게 주지 않고 비교적 부담 없이 고액의 기부가 가능한 구조도 있기 때문이다.¹²⁾

계획기부가 성장하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액 기부 때문에 엄청난 사회 공헌을 하는 개인적 만족감, 둘째, 공익 연금형 기부처럼 계획기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 후에도 전망 향후 정기적인 소득의

10) 행정안전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16, 48면.

11) 강철희, 앞의 책, 9면.

12) 위의 책, 11면.

창출, 셋째, 세제상의 우대, 넷째, 미래의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의 필요성 등이다. 특히, 세제상의 우대는 기부자들이 계획기부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 공익단체에 대한 혜택

공익단체에 대한 장점은 첫째, 고액의 기부액, 둘째, 내용변경의 불가변성, 셋째, 단체의 재정 계획·관리의 전망성, 넷째,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성, 다섯째, 계획기부 기부자의 높은 연례 기부의 확립 등이다. 각각의 상품 구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기부자가 생전에 소득세와 유산 세금과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이점이 있다. 공익 단체에는 계획기부 중 특히 일반적인 공익신행신탁(charitable lead trust)과 공익 연금형 기부의 경우 설정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미래의 기부금 수입을 기대하는 용도가 정해진 자산(restricted fund)으로 계상된 등의 재정적 혜택이 크다.¹³⁾

3) 종류

(1) 유산기부(Bequest)

유산기부 혹은 유언에 의한 증여는 사망 시점 이전의 유언을 통하여 사망 시점에 기부하는 것으로, 전통적이고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계획기부이다. 전체 계획기부 중 80%가 유산기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전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관리를 하다가 사망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유언을 통해 지정한 단체 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유산기부는 기부행위의 실행 조건 유무, 자산의 분배 형태, 특정 자산 지정, 기부 시점의 연장 등을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 관련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부 자체가 취소될 여지가 있다. 이에 기부자가 사망하는 시점 이후 기부가 시행되기 때문에 기부 의사결정 이후 기부시행의 시점까지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부자가 살아있는 동안 기부자산을 바탕으로 생활비·의료비 등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며, 기부자의 유언에 대해 상속자 등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13) 교육부, 「대학의 기부금 신탁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37면.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¹⁴⁾

(2) 개인재단(Private Foundation)

개인재단은 종교·자선·과학·교육 등 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부자가 재산을 출연한 이후에도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재단은 기부자들 중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기부이다. 다만 재단의 수익이 설립자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배분될 수 없다.¹⁵⁾

개인재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으로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설립자인 개인·가족·기업으로부터 재정을 조달한다. 둘째, 매년 추가로 설립자나 공공기관 등 외부로부터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재단 소유의 재산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매년 발생하는 재단의 지출을 충당한다. 셋째, 보통은 자체적인 자선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단체의 지원을 통해 재단 설립의 목적을 달성한다.

(3) 기부자 조언 기금(Donor Advised Fund : DAF)

기부자조언기금(DAF)은 개인재단보다 많은 개인 등 기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나 자선조직 내에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 혹은 집합투자상품’ (fund: 이하에서는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기금(fund)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들은 펀드를 통해 전체 기부금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계획기부의 한 유형이다. 대부분의 기부자조언기금 제도에서는 기부자는 주로 현금·주식·채권 등의 자산의 형태로 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에 기부한 이후에는 기부금을 환급받을 수 없지만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 조언 기금과 같은 기금형 계획기부는 개인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개인재단과 달리 물리적 실체를 가지 않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면서 기부자가 원하면 기부에 관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차이

14) 강철희, 앞의 책, 5면.

15) 보건복지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 2011, 29면.

가 있다.¹⁶⁾

참고로 기부자 조연기금 이외에 기금형 계획기부의 한 형태로 PIF(Pooled Income Fund)가 있다. 이 유형은 기부단체가 설립한 기금에 기부자가 기부하게 되면 해당 자산의 운용수익을 기부자에게 지급하고 기부자 사후에 그 지분권이 기부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금의 한 형태라는 점은 기부자 조연기금과 같다. 그러나 금으로부터의 수익의 일부 혹은 전부가 기부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4) 기부연금(Charitable Gift Annuity : CGA)

기부연금은 기부와 투자를 결합한 형태로 계획기부 프로그램(planned giving program)의 핵심이다. 기부연금의 기본적인 유형은 기부자가 기부자산을 자선단체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기부를 받은 해당 자선단체 등은 기부자가 지정한 수혜자가 살아있는 동안 수혜자에게 일정 소득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⁷⁾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자산을 받은 자선단체 등은 계약이 종료될 때 잔액이 최초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부된 자산은 자선단체에 귀속되며 기부 후 환급되지 않으며, 기관은 연금지급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연금지급은 기부된 자산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선단체의 전체 자산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기부연금은 연금지급이 기부연금 펀드 등의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수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자선단체 등은 이러한 연금지급의 보장을 위해 민간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며, 의무적으로 가입하기도 한다. 기부연금 형태의 계획기부를 고려할 때에는 연금지급의 보장성 및 단체의 영속 가능성이나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의료재단, 교육재단 등의 기부연금을 선택하기도 한다.

실제로 기부연금은 병원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단체들은 기부연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연금의 특징들을 고려하게 되면 기대수명의 증가와 연금지급의 안전성 보장,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들 요인을 고려한 기부연금의 개발 및 기부행위 선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6) 이상신, 「법인, 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연기금 : 고액기부자들의 기부선택을 위한 주요 3가지 제도 비교 연구」, 아름다운재단, 2014, 173면.

17) 행정안전부, 「기부금여제 도입에 따른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8, 9면.

(5) 자선신탁(Charitable Trust : CT)

자선신탁은 기부자가 기부를 위해 신탁조직을 설립하고 세제상 혜택을 얻게 되면, 수혜자 측에서는 수탁자가 되어 신탁자산을 운영하는 구조의 계획기부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자선신탁은 크게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 CRT)’ 과 ‘자선선행신탁(Charitable Lead Trust : CLT)’ 으로 분류된다.¹⁸⁾

먼저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 CRT)이다. 이 유형은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소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기부를 통해 위탁한다. 이후 일정 시간이 흘러 신탁자산 운용의 수익을 돌려받고, 그 기간이 도과가 된 이후에는 자산을 기부자가 선택한 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방식의 자선신탁이다. 이 유형은 기부자 본인이 수탁자가 될 수 있고, 은행·신탁회사 등 다양한 법적 실체를 가진 주체가 수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선잔여신탁(CRT)과 기부연금은 기부자산에 의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다든 동일한 점이 있다. 그러나 기부연금은 수혜기관인 등이 기부자산을 직접 운용 및 관리하지만 자선잔여신탁(CRT)은 수탁자가 기부금을 운용·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자선잔여신탁(CRT)은 다시 기부자가 고정 수익을 받는지 또는 신탁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지에 따라, 다시 고정수익을 지급을 받는 CRAT(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와 신탁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을 받는 CRUT(Charitable Remainder Unitrust)로 분류된다.

그리고 자선선행신탁(Charitable Lead Trust : CLT)이 있다. 이 유형은 자선잔여신탁(CRT)과 기부자산의 귀속과 수익의 발생에 따른 귀속에 있어서 반대의 경우인 자선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선선행신탁에서는 기부자가 어떠한 신탁에 본인 소유의 자산을 산입하게 되면 관련 신탁은 고정된 기간 동안 그 자산의 투자·관리·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다. 이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신탁은 그 자산을 다시 기부자가 지정한 본인 혹은 제삼자의 수혜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자선선행신탁은 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기부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이후 해당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기 위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부하는 가치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및 해당 자산을 반환받게 되는 상속인 등 수혜자의 관점에서 세제상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세제상으로 기부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할지 수혜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할지 등이 중요한 이슈이다.

18) 이상신, 앞의 책, 191~192면.

2. 국내 기부 현황

2014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법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후 개인의 기부금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개인의 기부금이 2012년 2조 원대에서 2016년 1조 원대로 49% 감소했고, 기부 인원도 2012년 86만 명에서 2016년 39만 명으로 54% 감소하는 등 정부 정책이 기부문화 조성에 역행하고 있다.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 2014년은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36.7% 감소하였고 기부금 공제액은 41.8%가 감소하였다.

2016년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많을수록 1인당 평균 기부액은 높아지며, 1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의 납세자가 총인원 대비 가장 큰 비중(65.1%)을 차지하고 있다. 1천만 원 이하 구간의 신고인원은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이 적더라도 기부행위를 하는 기부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개인(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구 분	합 계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인원 수	기부금 (백만 원)	신고인원 수	기부금 (백만 원)	신고인원 수	기부금 (백만 원)
2012년	860,547	2,025,424	860,547	2,025,424	-	-
2013년	852,556	2,037,163	852,556	2,034,163	-	-
2014년*	539,987	1,184,798	104,627	436,966	435,360	747,832
2015년	478,893	1,072,256	16,200	124,454	462,693	947,802
2016년	392,220	1,033,707	7,162	83,995	385,058	949,712

* 2014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특별소득공제액과 기부금특별세액공제 대상기부금액의 합계임

자료: 2018년 국세통계연보, <https://stats.nts.go.kr/data/data_view.asp?idx=2163>.

〈표 3〉 개인의 종합소득 규모별 기부금 신고 현황(2016년)

구 분	1천만 원 이하	1~4천만 원 이하	4~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신고인원 (비율)	13,138 (3.3%)	131,404 (33.5%)	123,757 (31.6%)	116,647 (29.7%)	7,274 (1.9%)
기부금 (백만 원)	6,869	129,195	211,200	408,674	277,769
〈 1인당 기부금 〉	0.5	0.9	1.7	3.5	38.2

자료: 2018년 국세통계연보, <https://stats.nts.go.kr/data/data_view.asp?idx=2163>.

기부금 신고법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의 기부금 합계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4년까지 증가하던 법인의 기부금은 2015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은 신고법인 수는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지만 기부금은 2.7% 감소했다. 2016년 기준 소득금액 규모별 법인 기부금 현황을 보면 500억 초과 법인인 557개 법인이 약 3조 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그 소수의 기업(0.09%)이 전체 기부금 중 64.8%를 차지하고 있다. 결손법인도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 법인의 기부목적이 단순히 조세 혜택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도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수는 2010년 29,132개에서 2013년 29,849개, 2015년 34,743개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33,888개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표 4〉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구 분	신고법인 수	증감률(%)	기부금(백만 원)	증감률(%)
2012년	482,574	4.8	4,112,276	1.1
2013년	517,805	7.3	4,654,495	13.2
2014년	550,472	6.4	4,906,292	5.4
2015년	591,694	7.5	4,778,202	-2.6
2016년	645,061	9.0	4,647,156	-2.7

자료: 2018년 국세통계연보, <https://stats.nts.go.kr/data/data_view.asp?idx=2163>.

〈표 5〉 법인의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금 신고 현황(2016년)

구 분	신고법인 수	기부금(백만 원)
0원 이하	242,027	443,262
〈 결손법인 〉	219,511	440,520
0~100억 원 이하	400,393	782,351
100~500억 원 이하	2,084	409,179
500억 원 초과	557	3,012,364
합 계	645,061	4,647,156

자료: 2018년 국세통계연보, <https://stats.nts.go.kr/data/data_view.asp?idx=2163>.

〈표 6〉 공익법인의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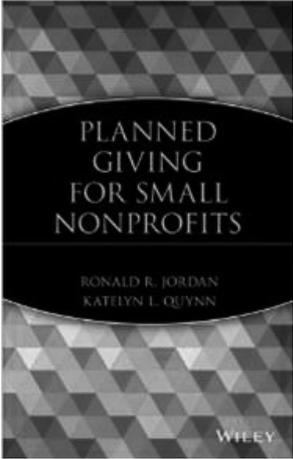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익법인 수	29,132	29,170	29,509	29,849	29,732	34,743	33,888
증감률(%)	-	0.1	1.2	1.1	-0.4	16.9	-2.5

자료: 2018년 국세통계연보, <https://stats.nts.go.kr/data/data_view.asp?idx=2163>.

Ⅲ. 소규모 민간 비영리 단체(NPO)의 계획기부의 도입 가능성

1. 총설

미국에서는 계획기부 관한 많은 비결을 담은 서적이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문헌 중에서 “Ronald R. Jordan and Katelyn L. Quynn, *Planned Giving for Small Nonprofits*,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2002”이라는 서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기부의 도입 방안을 살펴본다. 이 문헌에서는 NPO가 계획기부를 도입함에 단계 및 고려해야 할 등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문헌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 명	목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ckground Issues * Getting Started * Planned Gifts * Gifts of Assets Other Than Cash * Working with Donors * Marketing * Planned Giving and Taxes

첫째, 계획기부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계획기부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 몇 년 동안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여 목표 금액은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기부자에게 계획기부에 관한 내용을 잘 전달해야 한다. 복잡한 계획기부에 관한 내용을 기부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야 한다. 셋째, 기부자에게 계획기부에 참여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계획기부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기부자에게 단체의 목적활동을 설명하고, 계획기부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설명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계획기부의 특성과 계획기부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계획기부의 특성

1) “Development”와 “Fundraising”의 구분

미국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를 “Development”라고 하고, 실질적인 자금조달 활동을 “Fundraising”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Development”의 개념은 장기적인 기부자의 개척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Fundraising”이란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개념의 틈을 메우는 것이 계획기부제도의 궁극적인 역할이라고 한다. 특히, “Development”는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 활동과 지금의 시점에서 단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조달해 오는 활동 등을 전부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관점에서 계획기부는 기존 고액의 기부 등 다른 “Fundraising”활동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보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계획기부는 “Fundraising”기법 중에서도 관리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중요한 점은 계획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반적인 “Fundraising”으로 계획기부에 성공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Fundraising”을 한다면 명확한 설명자료(case statement)를 작성하고 잠재적 기부자의 프로파일링(profile)과 조사를 하고 계획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홍보해야 한다. 나아가 기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실행하여 기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 Ronald R. Jordan and Katelyn L. Quynn, *Planned Giving for Small Nonprofits*,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2002, at 31.

2) 오랜 기간이 필요한 계획기부의 특성

계획기부를 시작하기 위해선 필요한 정보에 대한 투자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Fundraising”과 비교했을 때 계획기부에서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를 바라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계획기부는 장기전이다. 계획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후 계획기부가 집행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투자를 하고 나서 성과가 나올 때 때까지 4~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²⁰⁾

계획기부의 가장 큰 장점은 여타 기부제도보다 기부금액이 많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유언에 의한 기부 건수는 일반 기부 건수보다 훨씬 적지만 개인 기부 총액의 20~25%가 계획기부인 유언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²¹⁾ 그리고 계획기부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기부금의 예측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획기부가 기부제도에 있어서 최선의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계획기부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지만 계획기부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올바르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성과가 나오기 시작 이전 어중간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되면 큰 손해가 발생 된다. 계획기부 프로그램 도입 이전에 장기적인 투자라는 생각을 피 기부단체가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계획기부의 구체적 도입 방안

1) 책임자의 선임과 전문가와의 제휴 필요성

계획기부를 실행하기 위해선 사항 전반을 책임지는 담당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책임자는 조직 내외에서 계획기부의 전도사로서 프로그램을 홍보해야 한다. 또한, 계획기부 개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를 교육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세제나 기부 시장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내부 연수를 1년에 1~2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부 교육 및 담당자가 외부에서 최신 정보

20) Ibid., at 31.

21) Ibid., at 96.

를 얻고, 다른 단체와 정보 교환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²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획기부는 장기적인 노력이며, 기부자와 잠재적 기부자와의 관계 구축을 지속해서 해나감으로써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담당자와 직원이 빈번하게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이유는 최소 2년 동안 담당자가 변하지 않아야 겨우 효과가 나온다는 의미이다. NPO는 처음부터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높으므로 금융기관, 변호사, 컨설턴트 등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운영 및 연금지급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설계 등 업무 위탁 분야를 파악하고 업무 제휴를 맺어야 한다.

2) 계획기부 대상의 기준 마련

계획기부의 기부 상품은 많이 있지만, NPO가 계획기부를 도입할 시에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과 제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유언에 의한 기부금만으로 시작하는 방안이 있다. 미국에서도 계획기부의 70~80%가 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언을 통해 기부금액 또는 잔여 재산의 비율을 기부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증여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런 기부자의 의견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방향성도 얻을 수 있다.²³⁾

이처럼 피기부단체의 조직이 완비되면 다음 단계로 금융기관과의 제휴하여 신탁의 활용 등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기부 상품을 제공할 것인지, 또는 어떤 자산을 기부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실행과 함께 다음 단계를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기부에서는 다양한 기부 유형으로 현금, 신탁,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 등을 받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에 계획기부를 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익 잔여재산 신탁(Charitable Retainer Trust) 등은 기부자가 나이가 어리다면 수명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수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수록 수수료가 늘어나 최종 기부시에는 기부금의 잔금이 거의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2) Ibid., at 142.

23) Ibid., at 130.

3) 기부자에 대한 혜택과 피기부단체의 참여

계획기부 이후 다음의 기부로 이어지는 “Fundraising”을 성공하기 위해 답례의 구조나 기부자에게 주는 혜택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자 모두에게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계획기부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에서 혜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²⁴⁾

계획기부를 시작하기 위해선 피기부단체의 내부 관계자에 계획기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가령, 스스로 유언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부자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으며, 문제점을 찾아내어 완성도 있는 계획기부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이사와 관계자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기부단체의 목적과 공익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공표할 수 있다.

4) 기부자와 잠재적 기부자에 대한 분석

계획기부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부자와 잠재적 기부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기부자 정보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는 계획기부에 관한 “Fundraising”과 관련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기부자의 정보는 가족의 구성, 대략적인 나이, 출신 학교, 직업, 취미 등이다.²⁵⁾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때는 기부자와 잠재적 기부자와의 대한 감사의 전화, 이벤트 등을 통한 소통을 통해 정보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보의 관리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를 엄격히 행해야 한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을 제한하고 기부자의 허가 없이 제삼자에게 정보를 넘겨 주지 않는 등의 보안 문제에 주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래는 분석해야 하는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24) Ibid., at 31.

25) Ibid., at 37.

(1) 자산과 가족 구성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개인 자산이 늘어난다. 또한, 주택용자금의 상환과 자녀의 양육이 종료 되는 경우에 기부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많아진다.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부를 절세 대책의 하나로 생각하기 쉽다. 아이가 없는 부부 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 독신자들이 계획기부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쉽다.

(2) 소규모 비영리 단체(NPO)와의 관계와 기부 동기의 부여

지금까지의 단체와의 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계획기부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에 고액 기부를 하지 않아도 이사 및 자원봉사자 등 형태로 참여해준 사람 등도 중요한 잠재적 기부자이다. 기부자에 의해 기부행위에 대한 동기는 다양하다. 이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거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부를 하고 싶은 것인지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 측의 요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요구에 맞춘 기부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²⁶⁾ 이러한 기부자의 욕구를 어떤 형태로 실현할 수 있을지는 계획기부 프로그램 담당자의 창의력이 필요하다.

(3) 기부에 관한 경력

기부자 중에 거액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같은 사람들이 계획기부에 흥미를 갖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사람의 기부 내용(다른 단체에 기부도 포함)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5) 계획기부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기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부제도이다. 이에 소규모 비영리 단체에서는 처음부터 계획기부 마케팅 도구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기존의 매체인 소식지, 잡지, 웹 사이트,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단체의 활동이나 계획기부 프로그램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부자의 정보에서 나이, 기부 내용 등의 조건에 따른 특정한 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 기부자에

26) 기부자의 동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세금 우대 및 수익률 등 금전적인 것, 과거에 그 단체의 수혜자로 신세를 진 감사를 표하는 것, 사망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탄생 기념으로 후속세대에 대한 공헌,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함이다. Ibid., at 208.

기부연금(Charitable Gift Annuity : CGA)에 대한 정보를 보내거나 50세 이상 70세 이하에서 지금까지 주식 기부를 한 사람에게 대해 소득 펀드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다.²⁷⁾

기타 마케팅 프로그램으로는 전문가를 모집 계획기부위원회를 만들고, 계획기부 계약을 한 기부자를 위한 모임(Society)을 발족하고 잠재적 기부자를 모으고 금융계획과 기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계획기부에 관한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단체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²⁸⁾

4. 비즈니스 모델로서 텍사스 감리교 재단의 분석

1) 단체 소개 등

텍사스 감리교 재단(Texas Methodist Foundation, 이하 “TMF”로 지칭함)은 1938년에 감리교 성직자와 신자들에 의해 설립된 총자산 2.7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구성원의 수는 약 38명이며, 활동 분야는 감리교 단체에 대한 금융 서비스, 컨설팅 지역 활동 프로그램의 수립 그리고 감리교 성직자 육성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²⁹⁾

TMF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 금융기관이나 상담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NPO가 계획기부를 실행할 때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투자와 대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의 NPO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7) Ibid., at 172.

28) Ibid., at 21.

29) TMF 홈페이지, <<http://www.tmf-fdn.org/>>, (last visited on October 7, 2019).

〈그림 2〉 TMF의 로고와 전경



출처 : TMF 홈페이지, <<https://www.tmf-fdn.org/>>.

2) 사업 내용

텍사스 감리교 재단은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경험한 뒤 1938년 텍사스 기독교 감리교 교회와 활동 단체(NPO)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 지원하는 미션을 수행하여 중간 지원 조직으로 금융 서비스 및 조성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텍사스 감리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약 3천 억원이상으로 현재 900개의 단체, 400명의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텍사스 감리교 재단의 주축 사업은 모두 6가지가 있다.

〈표 7〉 텍사스 감리교 재단 운영 자산 내용 금액

ASSETS Cash	\$49,844
Accrued interest receivable	1,743,604
Stewardship income receivable	53,750
Pledges receivable	117,120
Loans	219,582,162
Corporate bonds and government securities	12,033,150
Stocks	22,770,656
Certificates of deposit	5,354,857
Land and building	290,749
Oil and gas interests*	209,106
Other investments	69,337
Fixed assets, net	3,303,856
Prepaid expenses	67,832
TOTAL	\$265,646,023
LIABILITIES AND NET ASSETS LIABILITIES:	\$1,326,484
Distributions, grants, and accounts payable	
Deferred revenue	2,035,976
Funds managed for investors	221,080,888
Amounts drawn on line of credit	2,000,000
Funds held as agents	21,143,086
TOTAL LIABILITIES	247,586,434
NET ASSETS	18,059,589
TOTAL	\$265,646,023
*Oil and gas interests	

출처 : TEXAS METHODIST FOUNDATION Financial Statements as of and for the Years Ended December 31, 2017 and 2016 and Independent Auditors' Report, (https://www.tmf-tdn.org/assets/uploads/docs/2017_TMF_Audit_Report.pdf).

〈표 8〉 텍사스 감리교 재단 주요 재무 데이터의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Funds managed for investors	122,103,538	135,298,372	147,916,761	170,203,680	182,680,451	215,047,393	221,080,888
Loans and church bonds	100,781,500	110,739,897	138,078,850	153,212,209	182,119,269	220,698,876	219,582,162
Other securities	39,388,546	44,950,572	35,468,872	45,066,636	36,352,555	33,850,456	40,158,663
Operating and memorial net assets	4,352,208	4,496,421	4,815,791	5,308,816	6,164,933	7,280,488	8,645,678
Planned gifts (Foundation, trustee)	19,080,912	19,793,467	23,614,534	24,405,317	25,786,530	25,373,834	28,896,522
Total Assets	149,971,143	166,374,076	185,777,662	206,693,686	226,613,821	261,341,466	265,646,023

출처 : TEXAS METHODIST FOUNDATION Financial Statements as of and for the Years Ended December 31, 2017 and 2016 and Independent Auditors' Report, <https://www.tmf-fdn.org/assets/uploads/docs/2017_TMF_Audit_Report.pdf>.

(1) 투자 서비스

TMF는 일반 금융상품 못지않은 수익을 내는 투자를 통해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 단체 특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방법, 투자 전략, 자산 배분, 투자 의사 결정 등에 대해서는 TMF 담당자가 조언하고 있다. 또한, 주식투자의 경우 투자대상 회사의 선정에 대해서는 수익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 교회에서 사회적 이념(Social Principl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이념은 환경, 인권, 정치, 사회, 세계 평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폭넓은 분야에 관한 감리교의 방향이 기반이 되고 있다.³⁰⁾

30) TMF, Texas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9 Pre-Conference Journal, at 108.

(2) 대출 서비스

감리 교회와 활동 단체가 앞으로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데 필요하다. 건설비와 토지 매입비용 및 건물 건립비, 기타 차량과 기기류의 구매비 등을 TMF 대출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높은 이자로 대출이 있는 경우의 조정도 시행하고 있다. TMF의 투자 펀드 중 하나인 감리교 펀드로서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 1960년대 초에 처음 대출이 대출되고 이후 이 서비스는 45년간 계속되고 있으므로 약 1,000개의 교회가 TMF 대출 시스템을 사용해왔다. 현재는 약 2,800억 원 이상을 대출하고 있다.³¹⁾

TMF 대출 책임자는 감리 교회와 활동 단체의 운영에 관한 전문가이며, 일반 금융기관보다 이 분야에서 경험의 축적이 있으므로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다. TMF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운영 예산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무리 없이 상환 계획을 현금 흐름 예측 등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3) 기부금 모집에 관한 컨설팅

교회와 활동 단체가 모금을 위한 수행에 필요한 비결에 대한 무료 교육하고 있다. 또한, 개별 단체의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컨설팅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³²⁾

(4) 계획기부와 기금 설정·운용 서비스

계획기부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서 지원하고 실제 운용도 하고 있다. 기부 접수 방침 및 기타 다양한 종류의 계약서 양식 제공하기 위해 단체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기부 및 기금 모집 캠페인을 벌일 때의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한다.³³⁾

31) TMF, <<https://www.tmf-fdn.org/loans-investing/loan-services/about-the-methodist-loan-fund/>>, (last visited on October 7, 2019).

32) TMF, <<https://www.tmf-fdn.org/loans-investing/loan-services/expert-loan-consulting/>>, (last visited on October 7, 2019).

33) TMF, <<https://www.tmf-fdn.org/terms-of-use/>>, (last visited on October 7, 2019).

(5) 보조금 프로그램과 성직자 지도력 프로그램의 운영

감리교 활동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 지원 활동에 의의가 있는 것에 대해 보조금을 내고 있다. 감리교의 미래를 담당하는 성직자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도 하고 있다.³⁴⁾

34) TMF, <<https://www.tmf-fdn.org/grants/apply-for-a-grant/>>, (last visited on October 7, 2019).

IV.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세제상의 개선방안

1. 기부금 관련 세제에서의 이슈와 개선 방향

1) 기부금 관련 세제에서의 이슈

(1)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의 비교 검토

계획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선 일반적인 기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세제의 도입은 계획기부 활성화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부와 관련한 현행 세제의 쟁점은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의 타당성 검토이다.³⁵⁾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기부금과 관련한 세제의 근본 취지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것이다. 아직 그 취지에 대한 타당성과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부금에 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³⁶⁾

주지하다시피 소득공제는 조세제도에서 크게 두 가지의 취지에서 사용된다.

첫째, 실질과세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연관성이 높은 지출항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산업현장에서의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이 있으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적인 항목으로 보아 소득에서 차감할지에 대하여 개인의 선택에 대한 소비로 판단하여 소득에 포함해서 과세할지 여부이다.

둘째, 사회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 및 서비스는 과소하게 생산·소비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 및 서비스는 과도하게 생산 및 소비되기 마련이다. 과세당국이 조세제도를 통해 세 부담을 증가 혹은 경감시켜 적절한 양의 재화·서비스가 생산 및 소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방식이 사

35) 임동원, 앞의 논문, 3면.

36) 선우희연·전병욱·정운오,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변화", 「통계연구」 제22권 제2호, 통계청, 2017, 154면.

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로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이나 고용 확대 등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 등이 있다.

결국, 소득공제는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와 사회·경제적 정책수단에 있어서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대부분 사회·경제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기부금 항목의 정책적 목적 및 세제상의 소득원천별 공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득공제 방식의 세제상 지원방식으로 재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 현행 기부 관련 세제에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

(2) 기부금의 세제 성격에 따른 타당성 검토

기부금에 관한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기부금 항목의 세제상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소득설과 비소득설이 대립한다.

먼저 소득설은 기부를 한 자가 기부로 인한 개인적인 만족이나 사회적 평판·존경 등을 얻게 된다는 점에 집중하여 기부를 개인적 소비로 보아야 하며, 결국 이는 소득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소득설은 기부금이 비록 공공의 이익에 기여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³⁷⁾

그리고 비소득설은 기부금이 소득 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라는 견해이다(통설). 이 학설의 주요 논리는 개인의 소득은 개인적 소비 또는 저축이나 자산의 축적으로 구성되며, 기부하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자면 기부를 한 자산 등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자산으로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기부를 받는 단체로 자산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부금은 납세자에게 소득이 아니라는 태도다.

비소득설은 기부금액만큼 발생한 지출을 소비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소득이 아니라 피기부단체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 다시 말해, 기부금의 이전행위가 개인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항목이 아니라는 태도이다. 이에 기부를 한 개인의 만족감과 사회적 평판·존경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소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³⁸⁾ 다만, 기부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점과 단순 소비가 아니라 부의 이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7) 민태욱,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조세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08, 79면.

38) 김현동, "기부 관련 현행 세제의 타당성 고찰", 「조세법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4, 124면.

2) 세제상 지원 강화 방안 검토

소득세제에서의 기부금 항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정책적인 목적으로 세액공제, 소득공제, 필요경비 포함 방식과 관련 없이 대부분 공제율과 공제금액의 한도, 이월공제 기간의 한도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금도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만일 필요경비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의 공제 한도 규정이나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은 기부가 일회적이고 기부 규모 역시 한해의 소득보다 상당히 작은 소액 규모의 기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만일 계획기부와 같이 한 번의 기부로 인하여 장기간의 영향이 발생하는 기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제 한도의 확대와 함께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부가 단순하게 세제에서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15년의 한도로 하여 지속해서 공제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⁴⁰⁾

(1) 기부금의 정책수단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의 도입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 및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의 전환 이후에 기부의 규모가 줄었다는 점이다. 특히, 세법개정 이후 세액공제율이 15%와 고액기부는 25%라는 것과 개정 전 소득공제의 방식이 소득자에게 적용되던 세율이 6%~38%라는 점과 개정 이후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방식이 아니라 필요경비 산입방식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늘었다는 점을 판단했을 때 공제방식의 변화가 기부금 규모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⁴¹⁾

이렇듯 기부와 관련한 세제에서의 지원제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정한 취지는 2014년의 세법의 개정 시에 같은 금액을 지출했을 때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상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방식상의 역진적인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주

39)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 224면.

40) 2018년 말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제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41) 선우희연·전병욱·정운오, 앞의 논문, 154~155면.

는 것은 현행 세제가 추구하는 수직적 공평성 중에서도 누진적 세율에 따른 공평성 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⁴²⁾

다시 말해, 수직적 공평성을 비롯한 경제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나 같은 담세력에 같은 세 부담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 및 조세제도의 단순성 등을 어느 정도 고려하더라도, 기부를 통한 공익 목적의 달성과 사회적 효용의 증대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기부를 지원 및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⁴³⁾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지원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2) 개인의 소득 간 세 부담 공평성 차원의 타당성 검토

세액공제 방식은 개인의 소득 간 세 부담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포함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기부금의 한도 내에서 최저 6%에서 최고 38%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2,000만 원 이하의 기부에 대해서는 15%, 2,000만 원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는 30%의 세액 감면을 받는다.⁴⁴⁾

개인의 과세표준 2억 원과 기부금지출액 4,000만 원을 가정할 때는 사업소득자 외의 자와 사업소득자의 세 부담 절감액은 각각 7백만 원과 1천5백2십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⁴⁵⁾ 이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방식을 없애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의 소득 세제상 소득원천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금이 세제상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바로 소득이 아닌 기부금 규모에 따른 세 부담 경감률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는 소득공제 방식이었다. 그래서 같은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고소득자가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 큰 세액 감면을 얻게 된다.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방식에서는 기부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000만 원을 기초로

42) 위의 논문, 153면.

43) 전병목·안종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150면.

44) 아름다운재단, “기부금 세제 혜택 : 지정기부금 vs 법정 기부금”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9391>), (최종방문일 2019년 10월 7일).

45) 한국FP협회, “근로소득자는 기부액의 15% 절세”, (http://www.fpkorea.com/2014/kfpa_2015/sub/print.asp?p_bm_key=212&p_bd_key=13773), (최종방문일 2019년 10월 7일).

그 이상의 고액기부금의 경우에는 30%, 그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⁴⁶⁾

이같이 상대적으로 소액 규모의 기부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보다 현재와 같이 소수의 인원이라도 2,0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행위에 대한 세제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부 관련 세제의 취지와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소액의 기부라도 가능한 많은 기부자가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제상 감면을 얻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인원에만 고액기부 중심의 기부 세제의 지원 보다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⁷⁾

2. 계획기부의 도입 방안

우리나라에서 계획기부를 도입하기 위해선 이 제도와 관련한 여러 제도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가령, 가장 기초적인 계획기부의 형태인 유산기부 및 개인재단의 경우 「민법」에서의 유류분 제도나 재단 법인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선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의 개정을 바탕으로 계획기부를 도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계획기부의 여러 유형 중 이미 우리나라 도입이 추진되고 있거나, 도입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기부연금과 자선잔여신탁(CRT)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부연금이나 기부자선신탁과 같은 계획기부제도에 관한 세제에서의 이슈는 바로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기부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과 기부로 인해 얻게 되는 연금이나 수익의 지급 등을 어떻게 과세처리할지 여부이다.

1) 기부연금에 대한 세제상 검토

기부연금은 계획기부 중 대가를 돌려받는 대표적 유형이다. 기부연금의 구조는 연금지급 예상액과 기

46) 아름다운재단, “기부금 세제 혜택 : 지정기부금 vs 법정 기부금”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9391>), (최종방문일 2019년 10월 7일).

47) 채병완·임승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3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7, 346면.

부 예상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부연금은 기부약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기부금품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 관한 피기부 단체로 이전된다. 그러나 처분의 시기는 기부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는 시점 이후라는 점이다. 이에 기부 시점에서의 기부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 연금수급자가 작고했을 시 기부 자산이 자선단체로 완전히 양도되는 시점에서의 과세, 자선단체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처분했을 때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부 시점의 고려사항

기부 시점에서의 과세 문제는 기부 자산의 평가나 기부가액 산정 등이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부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자산에 대한 권리는 기부받는 단체에 양도된다는 점이다.⁴⁸⁾ 그러나 실제 자산을 매각해서 기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대부분 연금수급자가 작고하는 때이다. 그래서 기부 시점에서는 기부자에게는 기부 자산의 금액만큼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지와 그러한 범위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받는 단체가 증여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지와 함께 그 범위의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한다면 기부한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치평가 방식을 따라야 한다.

(2) 연금의 수급 시점의 고려사항

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개시 시점 이후 지급 받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부한 원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되고, 이자만 기부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기부연금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가 가족 등 제삼자면 증여세 과세가 쟁점이 된다. 기부연금과 같은 계획기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이 같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⁹⁾

참고로 기부연금과 구조상 유사한 미국의 기금형 계획기부 중 PIF(Pooled Income Fund)가 우리나라에 ‘공익 기부펀드’라고 하여 도입되었을 때도 기금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식이었다.⁵⁰⁾

48) 문성훈·김수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연구 -기부연금과 연금기부의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5, 18면.

49) 민주정책연구원,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세제 3법” 검토」, 2015, 2면.

5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2011, 62면.

기부 시점에서 기부 예상금액 산정 시 반영한 기부연금지급률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결정되는 기부연금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부 시점에서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으로 기부 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수급자가 기부 시점의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연금수급자의 사망 시점

만일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과세할지가 문제이다. 이는 최종 연금수급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기부를 받은 단체는 기부 자산을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사망의 시점과 동시에 기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또한 이 시점이기 때문에 증여세의 과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 세제상으로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액에 불산입하고 있다. 이에 기부연금 등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자선단체의 자산 매각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부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부를 받은 단체가 기부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부의 목적이 된 사업의 수행하기 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2) 자선잔여신탁(CRT)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의 제시

기부연금과 자선잔여신탁(CRT)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 두 제도는 기부자가 재산을 이전하고 난 후 일정한 대가나 이익을 받는다는 점과 기부자의 사망 또는 신탁이나 계약의 종료 시점에 기부 자산이 기부를 받는 피기부 단체에 완전히 귀속된다는 점에서 같다.

이에 반해 자선잔여신탁(CRT)과 기부연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연금의 경우 기부받는 단체에 자산을 직접 기부하고 단체로부터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자선잔여신탁(CRT)의 경우 신탁에 자산을 기부하고 신탁으로부터 수익을 받는다. 둘째, 자선잔여신탁(CRT)의 경우 수령을 하는 수익의 금액이 고정금액 또는 변동금액이다. 그러나 기부연금의 경우에는 고정금액이다. 셋째, 자선잔여신탁(CRT)의 경우 기부연금보다 더 큰 금액을 요건으로 하지만 기부연금은 그렇지 않다.

이같이 자선잔여신탁(CRT)과 기부연금은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므로 기부자와 피기부단체에 대한 시점별 과세의 처리는 대부분 동일하게 법률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선잔여신탁(CRT) 중 수익금

을 변동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부시점의 기부가액 산정 및 산정금액 이상의 수익의 지급 시 과세상 처리 문제 등 있다. 자선기부신탁을 시행은 먼저는 고정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수익의 변동금액에 대한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안

자선잔여신탁(CRT)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신탁을 통한 기부 요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기부 자산의 요건으로 “금전으로 신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선잔여신탁(CRT)을 포함한, 계획기부 제도는 다양한 자산을 통해 기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의 기부도 세제상 신탁을 통한 기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표 9〉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 제2호 (생 략)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 다. (생 략)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 제2호 (현행과 같음)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제1항 제4호 ~ 제6호 (생 략) 제2항 ~ 제7항 (생 략)	라. <u>금전 등 재산으로 신탁할 것</u> 제1항 제4호 ~ 제6호 (현행과 같음) 제2항 ~ 제7항 (현행과 같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안

계획기부를 도입하기 위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기부자가 기부대상 단체로부터 수익이나 이익 및 연금 등을 받을 때는 애당초 기부한 재산에 대해 피기부 단체에게 과세하지 않았던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이에 계획기부의 도입을 위해 해당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부로 인한 연금이나 일정한 수익·이익에 대한 요건이나 범위·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기부단체의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

〈표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에 대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액 불산입)	제16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 ~ 제3항. (생 략)	제1항. ~ 제3항.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설 2016. 12. 20., 2017. 12.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설 2016. 12. 20., 2017. 12. 19.>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연금·수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항 (생 략)	제5항 (현행과 같음)

V. 결 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복지국가의 철회와 정부 역할의 축소가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생존경쟁, 소득 양극화, 빈곤 등의 심화로 국민들이 자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를 지역사회에서 민간차원으로 해결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도 재정악화라는 불가피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회복지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와 소득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이후 복지 수요의 총량이 확대되면서 기부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05년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강화, 기부금품 모집 규제의 완화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입되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부 동기를 부여하고, 기부문화를 사회 저변에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인 기부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기초가 되지만 자발성과 함께 제도적인 기부문화 증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부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이 기부금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 기부금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비영리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다. 대개 기부와 자원봉사로 대표되는 밖에는 비영리조직이 자선, 사회복지, 장학이나 교육, 문화예술의 육성 등의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기부와 자선으로 가능하게 된 공익적 조직의 활성화는 특정 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명분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불우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전통이 있었다. 특히 종교단체의 기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기부 전략만 잘 수립한다면 기부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부문화의 확산에 대한 중요성을 염두해두고 국내에서의 계획기부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행 세제상 기부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계획기부 활성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 계획기부의 구조는 신탁 업무, 자산 관리·운용 업무에 대한 수수료와 취급 자산 높은 확대 등 비영리 기관의 장점 이외에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즉, 고액기부 때문에 엄청난 사회 공헌을 하는 개인적 만족감, 공익 연금형 기부처럼 계획기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 후에도 전망 향후 정기적인 소득의 창출, 세제상의 우대, 미래의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의 필요성 등이다. 특히, 세제상의 우대는 기부자들이 계획기부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소규모 민간 비영리 단체(NPO)의 계획기부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NPO의 계획기부 도입을 위해선 몇 가지 검토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 책임자의 선임과 전문가와의 제휴가 필요하며, 계획기부 대상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혜택과 피기부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며 기부자와 잠재적 기부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규모 비영리 단체(NPO)와의 관계와 기부 동기의 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세제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부금 관련 세제에서의 이슈와 개선 방향으로서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의 비교 검토하였다. 기부금 항목의 정책적 목적 및 세제상의 소득원천별 공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득공제 방식의 세제상 지원방식으로 재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 현행 기부 관련 세제에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세제상 지원 강화 방안을 위하여 계획기부와 같이 한 번의 기부로 인하여 장기간의 영향이 발생하는 기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제 한도의 확대와 함께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부가 단순하게 세제에서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15년의 한도로 하여 지속해서 공제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획기부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부연금과 자선잔여신탁(CRT)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 두 제도는 기부자가 재산을 이전하고 난 후 일정한 대가나 이익을 받는다는 점과 기부자의 사망 또는 신탁이나 계약의 종료 시점에 기부 자산이 기부를 받는 피기부 단체에 완전히 귀속된다는 점에서 같다.

자선잔여신탁(CRT)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신탁을 통한 기부 요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기부 자산의 요건으로 “금전으로 신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선잔여신탁(CRT)을 포함한, 계획기부 제도는 다양한 자산을 통해 기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의 기부도 세제상 신탁을 통한 기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계획기부를 도입하기 위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기부자가 기부대상 단체로부터 수익이나 이익 및 연금 등을 받을 때는 애당초 기부한 재산에 대해 피기부단체에게 과세하지 않았던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이에 계획기부의 도입을 위해 해당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부로 인한 연금이나 일정한 수익·이익에 대한 요건이나 범위·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기부단체의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철희, 「계획기부 개념과 발전현황에 관한 기본연구」, 아름다운재단, 2010.7.
- 김현동, “기부 관련 현행 세제의 타당성 고찰”, 「조세법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4.
- 문성훈·김수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연구 -기부연금과 연금기부의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5.
- 민태욱,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조세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08.
- 신우희연·전병욱·정운오,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변화”, 「통계연구」제22권 제2호, 통계청, 2017.
-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오준석, 「계획기부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아름다운재단, 2010.07.
- 오준석·이상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계획기부 연구」, 아름다운재단, 2012.03.
- 이상신, 「법인, 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 고액기부자들의 기부선택을 위한 주요 3가지 제도 비교 연구」, 아름다운재단, 2014.
- 이상신, 박 훈,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아름다운재단, 2012.03.
- 이상우, “국회, 기부연금제도 입법 추진”, 「kiri 고령화 리뷰」, 보험연구원, 2016.
- 임동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KERI Insight 19-03」, 한국경제연구원, 2019.
- 전병욱·안종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세정연구원, 2005.
- 채병완·임승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3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2011.
- 교육부, 「기부금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재원 다변화 및 교육신탁기금 운영 연구」, 2015.
 , 「대학의 기부금 신탁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 민주정책연구원,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세제 3법” 검토」, 2015.
- 보건복지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개발」, 2011.
- 행정안전부, 「기부급여제 도입에 따른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8.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6.

2. 외국문헌

- David N. Barkhausen, The Role of Life Insurance in Enabling Large, Low Cost Charitable Gifts, Life Insurance Advisors, Inc., 2002.
- Katherine Swank, Michael Quevli, “Prospect Research for Planned Gifts: Using Predictive Donor Profiles, Wealth, and Asset Screenings to Identify High-End Planned Gift Prospects”, blackbaud, 2011.
- R.S. CLARKE ET AL., Meteorites and the Smithsonian Institution, Geological Society London Special Publications 256(1), January 2006.

Ronald R. Jordan and Katelyn L. Quynn, Planned Giving for Small Nonprofits,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2002.

TMF, Texas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9 Pre-Conference Journal.

TEXAS METHODIST FOUNDATION Financial Statements as of and for the Years Ended December 31, 2017 and 2016 and Independent Auditors' Report,

3. 웹사이트

아름다운재단,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

한국FP협회, <<http://www.fpkorea.com>>.

2018년 국세통계연보, <https://stats.nts.go.kr/data/data_view.asp?idx=2163>

TMF 홈페이지, <<http://www.tmf-fdn.org/>>.

2019년
기획연구
보고서

Part.3

South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Researcher Associations

김성주 |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진경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책임연구자



김성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학력

School of Social Work, Indiana University, Ph.D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Minor Ph.D.

Mandel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M.S.S.A.

Mandel Center for Nonprofit Organizations,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N.M.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주요경력

Monmouth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djunct faculty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Research fellow

연구실적

- Jeong, B & Kim, S. J. (2019). NPO/NGO higher educ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Social movement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drives. *Journal of Nonprofit Education and Leadership*, 9(1), 39- 62.
- Kim, S. J. & Kou, X (2014). Not all empathy is equal: How dispositional empathy affects charitable giving.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26(3), 1-23.
- Kim, S. J. (2014). Joint crowd-out: Will charitable donors cut donations to human service organizations when the government increases welfare spending? *Journal of Nonprofit Management*. 17, 24-47.

공동연구자



정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력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주요경력

현) 총리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연구실적

- 정진경 외 (2018) 코이카 해외봉사활동 경험이 귀국단원의 사회진출 및 사회환원에 미치는 영향 연구. KOICA
- 정진경 외(2017)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수립연구. 행정안전부
- 정진경(2017)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 연구: 금지에서 규제로, 규제완화에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입법과 정책. 9(2):377-400.

South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Researcher Associations

1. 연구의 배경

2. 한국NGO학회 (KANGOS)

3. 한국비영리학회 (KANPOR)

4. 한국 비영리&필란트로피 연구자 네트워크 (KNPRN)

5.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 Voluntaristics - 비영리, NGO, 시민사회, 자원봉사, 필란트로피, 제3섹터, 사회적경제 등을 포함하여 통칭하는 신생 용어- 분야에서 최초의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다학제적 학술조직인 ARNOVA(1971) 설립 이후 지난 40여년간 ISTR, ERNOP 등 50여개 이상의 국제적 또는 개별국가 수준에서의 voluntaristics 학술연구 조직이 증가(Smith, 2013).
- 한국에서 VRA(Voluntaristics researcher association) 의 등장은 1987년 이후 비영리/시민사회조직의 급속한 팽창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대 및 1999년말 이후 비영리섹터에 대한 제도화를 배경으로
 - 1999년 전후 한국사회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등 전통적 학문 분야에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 2000년 한국비영리학회 및 한국NGO학회의 설립으로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독립적인 학술활동이 시작됨.
- 본 연구는 ARNOVA와 ICSERA 설립자인 David H.Smith의 책임연구 하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 수준에서 설립된 voluntaristics 학술조직 15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집필되는 핸드북의 Book chapter로서, 한국비영리학회, 한국NGO학회, 그리고 미국에 기반을 둔 한국비영리필란트로피 연구자 네트워크를 조사한 것임.
- 연구 기간은 2019.2월~9월이며, 자료의 수집은 각 학술조직의 전·현직 회장 및 설립당시부터 참여했던 연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개별인터뷰, 추가자료조사를 거쳐 이루어졌음.

2. 한국NGO학회 (KANGOS)

1) 설립과정

- 시민사회조직의 성장의 결과,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부문의 학자와 실무자 사이에서 NGO에 대한 학회의 필요성 대두
 - 경실련, 참여연대 등 새로운 시민운동그룹에 교수, 전문가 다수 참여
 - '1999년 서울 NGO 국제 회의' : 한국의 정식 NGO 연구학회의 필요성을 자극하여 KANGOS 구축에 큰 영향
- 2000년 12월에 설립 당시 '한국 NGO 연구그룹' 이었으나, 1년 후인 2001년에 '한국 NGO 학회 (KANGOS)' 로 명칭변경
 - 초대 설립멤버: 김영래(전 아주대 총장), 김옥인(연세대 교수), 조대익(고려대), 임현진(서울대 명예 교수), 박상필(성공회대 교수)
 - 초대회장: 임현진 교수
- 2002년 7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설립목적: 다양한 국가의 외국 NGO들과 학술교류를 하며, 글로벌 시민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학회의 운영

- 학회의 구성
 - 학회임원
 - 이사회 : 1명의 회장, 5명의 부회장 및 1명의 사무국장

- 소위원회 : 1) 총무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외부협력위원회
- 5) 남·북 학술 교류위원회, 6) 시민사회위원회, 7) 연구 윤리위원회

● 회원의 구성

- 설립초기 100여명 → 2019 현재 350여명
- 사회학·심리학(15%), 경제·경영(15%), 사회복지(5%), 법·행정·정치(60%) 등 다학제 배경

● 학회 재정

- 정부보조금 50%, 후원·기부금 35%, 회원회비 10%
- 2000년 중반 이후 기업의 후원 감소에 따른 재정확보 어려움

3) 주요활동

■ KANGOS 학술대회 : 년 2회 정기적 학술대회

‘민주주의’, ‘시민 사회의 역할과 책임’, ‘지방의 중앙 정부 권력 이양’, ‘지방 정부’, ‘민주 시민성을 위한 교육’, ‘민관 거버넌스’ 등 주요 의제를 다룸

-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NGO의 기초적인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NGO 분야의 역사, 가치, 개념적 프레임, NGO의 역할과 비판 등 다루며 한국 NGO분야의 담화를 이끌어옴(2019. 봄. 33차 학술대회 개최)

■ KANGOS NGO 포럼 : 한국의 NGO 분야를 위한 주요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의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 2회 또는 3회 개최됨

■ 학술지 발행: 「NGO 연구」

- 2003년에 제 1권이 발행 된 이래로 총 24회 발행됨. KCI에 미등록 상태

4) 한국의 비영리섹터에 대한 기여

- KANGOS는 지난 20년간 한국 비영리섹터의 학문적 성장과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 키플레이어로 활약
- 교육·연구·컨설팅 등을 통한 비영리/비정부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
- 또한 KANGOS는 비영리 옹호단체에 의해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개혁에 크게 공헌
- 특히 시민사회 단체는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의 정치개혁 운동과 정치 민주주의, 경제적 정의 및 다양한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이끌었음

3. 한국비영리학회 (KANPOR)

1) 설립과정

- 2000년 11월에 설립, 한국의 비영리 부문의 학자와 실무자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학회
- 비영리섹터 배경
 - 최초의 자금조달 및 배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여성문제를 다루는 첫번째 독립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이 설립되었고(1999), 국내 최초의 지역사회 재단인 '아름다운재단'과 '아이들과미래' 등 설립됨(2000).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 한국의 주요 사회적 과제로 떠오름(2000년대 초반)

- 2000년 11월 : 첫 총회 및 첫 학술회의에서 한국비영리학회 (KANPOR)가 설립됨
 - 초대 설립멤버 : 정구현·박태규(연세대), 황창순(순천향대), 정무성(송실대), 양용희(서울과학기술대), 문국현(유한김벌리), 박원순(아름다운재단)
 - 초대회장: 정구현 박사

- 2004년: KANPOR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 설립목적: 한국 비영리섹터의 학문적 발전, 비영리 경영과 리더십의 기술 및 지식을 연구함과 동시에 비영리 실천 분야와 연관된 회원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학회의 운영

- 학회의 구성
 - 학회임원
 - 이사회 : 1명의 회장, 3명의 부회장, 1명의 사무국장
 - 분과위원회 : 1) 사회/경제위원회 2) CSR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NGO위원회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6) 금융위원회 7) 재단위원회 8) 출판위원회

 - 회원의 구성
 - 설립초기 60명 → 2019. 기준 약 115명
 - 사회복지분야 및 경제/경영(30%), 행정/정책(10%), 사회학/심리학(5%), 기타(25%) 다학제 배경

3) 주요활동

- 학술대회: 년 2회
 - 필란트로피, 기업과 비영리의 공조, 비영리의 책임과 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경제 등의

비영리 연구의 실질적인 의제에 초점. 또한 필드기반의 민간 부문과 비영리 부문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비영리 전문성을 집중 조명하고 있음

* 8차 ISTR 아태지역대회 개최(2013)

- 학술지 발행: 「한국비영리연구」
 - KCI등재 후보, 2002년 첫 발간 후 2009년까지 총 380여편 논문 수록
-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지표
 - 한국의 CSR 활동의 국가표준 평가기준을 만든 최초의 학술 지표
 - 이 프로젝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의 10대 기업이 후원
 - 지표는 CSR 활동을 파악하고 그 효율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인용하고 있음

4) 한국의 비영리섹터에 대한 기여

- 지난 수십년간 학회는 열정적인 헌신과 참여로 비영리섹터에서의 핵심으로 임해 왔음
- 한국 비영리섹터의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응
- 또한 국내 최초로 CSR 평가 지표의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2013년에는 서울에서 제 8회 ISTR 아시아 태평양 지역대회를 개최함
- 구체적으로 KANPOR는 한국의 비영리섹터를 알리기 위해 20년 동안 국제적인 비영리 커뮤니티와의 교류에 전념하고 있음

4. 한국 비영리&필란트로피 연구자 네트워크 (KNPRN)

1) 설립과정

- 최초로 미국에 있는 한국 학자를 위해 형성된 비영리 필란트로피 연구자 네트워크(2008)
 - 비영리 단체, 필란트로피, 시민사회, 책임, 기업가 정신, 경영과 리더십, 봉사와 다양한 관련사안 및 주제에 초점
- 2008년 11월 : (시카고) 제37차 ARNOVA 학술대회에서 김성주 교수가 첫 모임 주관(12명 참석)으로 구성
 - 초대 설립멤버: 김성주(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이형진(성공회 대학교), 박상돈(인디애나 대학교)
 - 초대회장: 김성주 교수
- 2019년 : KNPRN은 ARNOVA에서 Common Interest Group (CIP)로 등록에 성공함
- 설립목적 : 비영리 및 필란트로피 분야의 한국인 연구자·학자들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연구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학회의 운영

- 학회의 구성
 - 학회임원
 - 이사회: 1명 회장, 2명의 이사회임원
김성주(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서지원(텍사스대학교 알링턴캠퍼스), 안성호(중앙 플로리다 대학교)

- 위원회: 2019년, 첫번째 위원회인 '자문위원회' 설립(4명)
미영 라몽페(오클라주립대학), 김미래(조지아주립대학), 정복교(킨대학), 루이스 리(알라바마 대학)

- 회원의 구성

- 2019년 현재 52명
- 사회복지, 공공정책/행정, 교육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

3) 주요활동

- KNPRN 연례회의

- 2008년 첫 모임 이후 KNPRN는 ARNOVA 학술대회에서 정회원 및 신규회원의 연례회의를 갖고 있음

- '비영리 도서 출판 캠페인' 과 '도서 리뷰 릴레이'

- 2017년에 시작하였으며, 비영리 연구를 위한 책들을 소개 및 추천
- 비영리와 필란트로피 연구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50권 이상의 책들이 권장되었고, 학회원들이 책들의 리뷰를 게재하였음

4) 한국의 비영리섹터에 대한 기여

-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비영리 필란트로피 주제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미국 내 비영리 연구를 하는 한국 학자와 연구자들의 경험 및 연구·학술을 공유하는 학제간의 학술조직이 전무했었음
- 최근에는 비영리 연구의 한국인 학자의 수가 급증, KNPRN은 비영리 필란트로피의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주요 네트워크 그룹으로 활약하고 있음

- KNPRN은 비영리 및 필란트로피에 관한 학술적인 지식과 경험을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과 학자에게 공유·지도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

5. 결론 및 시사점

- 학회 창립 당시 참여그룹의 헌신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음
- 비영리학회, NGO학회, KNPRN는 고유한 사명에 따라 회원의 구성, 주된 학술연구 분야의 초점 등에서 차별화된 특성이 존재
- 비영리/시민사회섹터의 담론과 제도의 방향을 주도하거나, 관련 현장(조직 및 실무자, 전문가, 연구자)의 요구에 따라 밀접한 연계를 둔 학술활동과 교육으로 비영리섹터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는 공통점
- 학회 회원 또는 학회 차원에서 국제적 비영리학술조직과의 네트워크로 확장
- 반면, 한국비영리학회 및 한국NGO학회의 경우 적은 회원수, 신진 연구자의 유입과 확보가 어려운 점(학회의 고령화), 재정의 불충분성 등과 같은 해결과제도 있음.
- 2000년 중반 이후 한국의 VRA는 비영리섹터의 분화와 확장에 따라 한국자원봉사학회(2005), 한국사회적기업학회(2014) 등이 설립되었으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20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2005) 등 민간 전문 기관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의 참여와 학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음.

South Korean Nonprofit/ Non-government Researcher Associations

Sung-Ju Kim, Jin-Kyung Jung

Introduction

The nonprofit/non-governmen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had existed throughout the South Korean history. However, modern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grown since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Kim & Hwang, 2002). After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1987, the activity and influe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S. Korea have exponentially grown (Jung, 2013; Jeong & Kim, 2019). In particular, nonprofit sector in S. Korea have been shaped and has developed as a comparable entity to the state and business sector under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1998-2003). In accordance with the Promotion of Nonprofit Civil Organizations Act of 1999, the registered nonprofits increased 14,033 in 2018.

The growth of nonprofit sector in S. Korea has become the main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voluntaristics researcher association in S. Korea, along with active research in traditional disciplines for this field. Traditional social science academic associations such as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KS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KAPA), and The Academy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KSWA) had alleged to address the nonprofit subjects as intensive academic topics. For example, the KSA (established in 1957) has highlighted ‘civil society’ as a core academic theme, such as “The future of civil society”, which was the theme of the conference

in 1999, and “The great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2001). The KAPA (established in 1956) had also held a forum to intensively discuss and present diverse papers on “Government and NGO” in its first seminar series in 2000. The AKSWA was established in 1999 to carry out specialized academic research on the manag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leadership, evaluation, and service performance measurement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addition, academic papers on voluntaristics such as donations, fundraising, volunteer servic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are continuously published through academic journals.

While the traditional social science academic associations have enhanced nonprofit topics, the first independent interdisciplinary academic organizations that specialized for nonprofit studies were established in the early of 2000 in S.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KANPOR)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NGO Studies (KANGOS), were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the growth of the nonprofit civil society sector and abundant academic discussions in 1999 and in 2000. Simultaneously, private institutions for nonprofit studies were also established in S. Korea, including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2001) and Community Chest of Korea NANUM Research Center on Philanthropy (2005) to carry out systematic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eld of philanthropy associated with practice fields.

While the nonprofit sector and the its professional researcher associations have comprehensively enlarged, initiated agendas has been subdivided into various subjects and categorie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economy, volunteer, donation, and so on. Based on the evolvement, voluntaristics researcher associations in S. Korea also began to diversify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nonprofit sectors. For example, the Korea Academy of Volunteerism was established in 2005 and the Academy of Social Enterprise (ASE) were founded in 2014.

In this chapter, we will introduce in detail the origins,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activities, and the contributions of three major voluntaristics researcher associations in South Korea: Korean Association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KANPOR); Korean Association Non-Government Studies (KANGO); and Korean Nonprofit Philanthropy Researcher’s Network (KNPRN).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GO Studies (KANGOS)

The Korean Association for NGO Studies (KANGOS) is South Korea-based nonprofit/non-government(NPO/NGO) researchers' association. KANGOS is one of the first and the oldest interdisciplinary, inter-professional association ever formed that focuses on NPO/NGO studies in S. Korea. Initially founded in December 2000, it was named as the Korean NGO Research Group. A year later, in 2001, the group renamed itself as the Korean Association of NGO Studies (KANGOS). This association aims to highlight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discussion on Korean NGO practices, to increase dialogue and cooperation between researchers and NGO practitioners, to dedicate academic exchanges with foreign NGOs in various countries,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lobal civil societ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History

The administrative history of KANGOS can be divided into two periods: the formative period, 1999-2000; and the sanctioned period, 2002- present.

Formative Period (1999- 2001). Since “the 1987 democratic uprising” in S. Korea, citizen’s movements were enforced to prosecute significant roles in democratization in S. Korea based on strong support by the civilian government of Kim Young Sam (1993-1998) and Kim Dae Jung administration (1998-2003). Major NGOs in S. Korea, for example,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the Korean Federation for the Environment Movement (KFEM), and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were established and aggressively participated in policy making and bolstering democratization in S. Korea. As the results of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NGOs, the need of researchers association for NGOs was significantly demanded

among the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the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¹⁾ in S. Korea.

The substantial triggered event that significantly affects building KANGOS was the 1999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GOs at Seoul Olympic Park from October 10th through October 15th, 1999. The Global Common Society (GCS) International under the auspices of KyungHee University hoste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Seoul Conference represented the first international level of major NGO gathering in the world. It is drawing 13,000 participants representing 1,360 NGOs from 107 countries. The Seoul Conference vigorously inspired the need for formal NGO researcher association in S. Korea. Especially, the conference significantly affected building KANGOS.

After the conference, the first formal step that lead toward the forming KANGOS was under the leadership by Yung-rae, Kim (Ajou University). Y. Kim and a number of scholars from diverse disciplines met and began the discussion to develop an association for NGO studies in S. Korea. Y. Kim and multiple other scholars all expressed dedication to establishing the association in one way or another. In 2000, the five members finally got involved in forming and establishing KANGOS. The five members were Y. Kim (Ajou University), Ok-in Kim (Yonsei University), Dae-ik Cho (Korean University), Sang-pil Park (SungKongHee University), and Hyun-j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ubsequently, Y. Kim drew up a constitution and by-laws for KANGOS with inputs from the founding members. Y. Kim and the founding members met and prepared the foundation of the association. They set up their base camp at the Y. Kim's personal research institute, named as "My Country Research Institute-Nae-Nara Yeonguso" in Seoul, Korea.

1) Roughly characterized, the term nonprofit highlights the management aspect of non-distribution constraints, tax-exempt status, and public/mutual benefits nature, whereas the term non-government stresses the independent nature of the civil society either simply as the counterpart of government or as the force for social movement. In S. Korea, the term nonprofit organization (NPO)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Although some scholarly discussions differentiate the term nonprofit and non-governmental, the scope of these two organizational entities is substantially overlapping (Kim, 2006). NPOs and NGOs were conceptually perceived as a self-governing, private, non-government organization for civil society in S. Korea, covering all kinds of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various public purposes such as human services, arts and culture, education, health, and others. In this sense, the terms NGOs and NPOs were interchangeably used in S. Korea in spite of their differentiated conceptual definition and origins. KANGOS have used "NGO" to indicate nonprofit sector and their identifications and activities. For the history of KANGOS, the term of NGO conceptually defined all kind of non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December 2000, Y. Kim and the founding members officially held the opening meeting at the Soongsil University in S. Korea and announced the first Korean NPO/NGO researchers' association, named Korean NGO Research Group at the meeting. Hyun-j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officially appointed as the first representative, and the other members were appointed as an ad-hoc committee to develop organizational structures, activities, and strategic planning for the association. H. Lim and the ad-hoc committee members were mainly dedicated to setting up the administration structure, academic activities, and amending bylaw. Under the leadership of H. Lim, the association's leaders devoted to building the association's journal, newsletter, website, biannual conferences, and its' membership and fees, etc.

Following a year of careful planning by the founding members, the Korean NGO Research Group was renamed as the Korean Association of NGO Studies (KANGOS).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and the first academic symposium were held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2001. Most of the members believed that the official history of KANGOS began with the first symposium in 2001 because the completed structured format and major activity of the association were formulated since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in 2001. The founding members who were also present at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included Y. Kim (Ajou University), Hyun-j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k-jun Kim (Ewha Womans University), Pil-sang Lee (Korea University), Chul-gyu Kang (University of Seoul). At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Y. Kim was elected as the first President of KANGOS.

The sanctioned Period, (2002- present). Since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in 2001, the first President, H. Lim and the Board of Directors were committed to incorporate KANGOS to achieve legal status. In July 2002, KANGOS was incorporated and achieved legal status as the registere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at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based on the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Support Act in S. Korea. The first board members had been devoted to editing and adapting the amended bylaw so as to complete the structure of KANGOS. The association became composed of and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units: A Board of Directors, a Steering Committee, councils, an Advisory Board, and Sub-Committees. The Board of Directors was comprised of one President, two Vice President, and one Secretary. The Sub-committees that were

created included: 1) General Affairs Committee; 2) Research Committee; 3) Editorial Committee; 4) External Cooperation Committee; 5) North And South Korea Academic Exchange Committee; 6) Civil Society Committee; And 7) Research Ethics Committee. KANGOS highlighted the North and South Korea Academic exchange committee as a means of offering particular attention to enhancing interactions between North Korean NGO scholars and South Korean NGO scholars and to underscore KANGOS/s dedication to inter-Korean unity. The committee implemented their initiatives by developing engaging inter-Korean joint conferences for NGO/NPO studies and researcher exchange programs for both North and South civil society and civil organizations. Additionally, KAMGOS reinforced the Civil Society Committee to interact with civil society and academic society, as they were involved in NGO studies in S. Korea. The Civil Society Committee has the mission focus to develop cooperative NGO forums and other collaborate programs with civil organizations (such as Seoul NGO Center, Chung-nam Civil Foundation, Busan NGO Center, etc). In addition to the sub-committees, the Advisory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were also enhanced to further the association's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Kyung-hee Kim (Chung-Ang University) was elected as the first Audit committee Chair in 2001. The appointed committee members for the Audit committee were invited and selected from academia, representatives from the major NGOs in S. Korea, and senior public officers in civic engagement throughout the country.

Presently, in 2019, KANGOS has an elected President, five appointed Vice Presidents, one appointed Secretary, thirteen appointed Advisory Board members, seven appointed Sub-Committee Chairs. Each subcommittee overseen by the Chair has three to six appointed committee members. Since its founding in 2001, the elected Presidents who have directed the KANGOS are Y. Kim, 2001 ~ 2003; Jae-chang Park, 2004 – 2005; Jae-il Oh, 2005- 2006; Jea-mook Park, 2007-2008; Hyeok-jea Son, 2009-2010; Myeong-lae Cho, 2011-2012; Jung-ok Lee, 2013-2014; Soo-chan Jang, 2015-2016, Sang-pil Park, 2017-2018, You-kyung Suh, 2019 ~ present.

According to the interview with former President Sang-pil. Park, the Board of Directors found itself burdened by administrative detail, as well as lacking an appropriate candidate for next President. In 2019, the President of KANGOS was appointed via recommendation by all of the committee

members. The current President, You-kyung Seo created the Steering Committee, comprised of all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each sub-committee Chairs to distribute the Board of Directors' responsibilities. All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other committee members have dedicated their volunteering efforts to honing their knowledge and sharing their academic and practical experiences for nonprofit sector in S. Korea.

Membership growth was accelerated in the early 2000s, but it was steady and generously have been decreased during recent years. KANGOS membership was about 100 in 2001~2005, became about 300 in 2006 ~ 2010. In 2019, approximately 350 individual members were registered, and six institutions were recorded as the member. The individual members were from various academic fields, including Law,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sociology, psychology, economic/business, social work, an others. Sixty percent of the total individual members were from Law or public administration, or public policy. 15% from sociology/psychology, 15% from economic/business, and 5% from social work. The original membership of KANGOS established the three types, including the full members, associate members, and special members. Full members were persons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 related to the field of NGO studies; Full-time employees at nongovernment organizations; current/former public servants who are/were in executive manager positions or above; executive officers who are currently working in private companies for NGO relations; and any other persons who the Board of Directors approves to be a full member. This category of membership offers full voting member benefits. Associate members were persons who graduate students, part-time staffs at NGOs, and civil servants who are in lower grader than executive manager position. Special members were individuals deemed by the Association to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NPO/NGO studies and KANGOS. All of the members can maintain their membership without paying the membership dues, but voting right is suspended for the non-paid members. In 2019, KANGOS has approximately eight paid members, and the rest of the members was a non-paid member among the 350 registered members.

Financial stability is one of the faced challenges for KANGOS. From the early 2000s to the end, KANGOS had strong sponsorships from the business companies because of substantial interests in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However, since the company sponsorships had been declined from the middle of 2000s, KANGOS has faced financial challenges. The strategic initiative for financial stability had aimed at diversifying revenue resources. Diversified strategic plans had ventured suchlike increasing committee members, highlighting paid membership, attempting external grants, and applying government subsidies. KANGOS aimed to avoid financial overdependence on businesses. The approaches led to increasing the number of committee members because committee member shall pay their membership fees, encouraging paid membership, initiating government grants and so on. In 2019, half of the total revenues came from government grants, followed by 35% of individual or foundation donations, 10% of membership fees, and others. Notably, none of the revenues from business in 2019.

Activities and Publications

KANGOS's principal activities include biannual conferences, the NGO forums, publications, and other academical and practical activities related to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The KANGOS conference was designed to create a public conversations and opportunities for presenting NGO studies. The conference aimed to highlight most important current agendas in the NGO sector in S. Korea and to stimulate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on NGO studies. KANGOS has appointed various significant NGO topics at the conferences, major agendas were accentuated at the conferences included "democracy," "civil society's roles and responsibilities," "devolution of central government power to the regions," "local government,"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private-public governance," etc.

According to the interview with the former President S. Park, KANGOS have selected the agendas based on the most primarily pressed issues for NGO sector at the time in S. Korea. The early area of KANGOS concentrated on history, values, conceptual framework of NGO sector because none of the scholarly studies (even non-scholarly works) was dedicated the foundational topics in S. Korea in the early 2000s. For example, discourse on issues of democracy and civil society were stressed to provide

an academical framework of NGO studies. The criticisms of the roles of civil society and NGOs in S. Korea was also significantly emphasized by KANGOS becaus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came one of the main actors who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reform movement at the early 2000s in S. Korea. Results of the discussions became one of the important keystones for NGO sector discourses in S. Korea. The identified agendas were studied and deliberated at the biannual conferences. In 2019, the 33rd biannual conference was organized on March 22, 2019, at KyoungHee University.

Another important activity of the KANGOS is the NGO Forum. KANGOS have held the NGO Forum with significantly pressed topics for NGO sector in S. Korea with key players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studies. The Forums were held twice or triple times per year based on the Research Committee's initiatives. The last NGO Forum, titled the Strategic Application of Korean Civil Society for National Administration, was held at Gwangju NGO Center in 2017.

From the establishing KANGOS, the leaders had reinforced their resources on building the association's journal. The first President, Y. Kim and his board of directors recruited editorial committee members in many different fields and disciplines and then the first regular issue appeared in 2003, named as Journal of NGO Studies (JNGOS). The Editorial committee dedicated to publish the journal regularly. However, enhancing people to publish their articles at the new journal was susceptible, so some of the journal issues were not able to publish on time. In S. Korea, the most effective way to stimulate motivation to publish articles to JNGOS was register the journal to Korean Citation Index (KCI) ²⁾. The association have devoted their initiatives to enrolling JNGOS as the KCI registered journal, unfortunately it was not succeeded until 2019. However, since the first volume of JNGOS was published in 2003, the journal was published 24 times. The most recent volume number 13 and issue number three was published in 2018. Since Soo-Gil Oh became the editor-in-chief in 2019, he have continued and expanded their efforts to register JNGOS to KCI system.

2) KCI (Korea Citation Index) is the system to analyze citation relationship among articles based on the database constructed by information about domestic journals, articles (including original papers) and reference (KCI, <https://www.kci.go.kr/kciportal/aboutKci.kci>).

Contributions to the South Korean Nonprofit Sector

During the recent decades in S. Korea, the size and scope of the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 late 1990s in various subsectors, including civil society, social service, international aid, environment, and education. The number of nonprofits is from about 102 in 1960 to 14,033 in 2018 which approximately 56%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S. Korea were established during the late 1990 and early 2000. While the nonprofit sector in S. Korea have tremendously expanded, KANGOS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on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in S. Korea by studying its fundamental theories, frameworks, skills and knowledge for nonprofit/non-government organizations, by contributing to develop infrastructure of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through education, research, consulting, and so on.

In addition, KANGO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developing to the 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reform in S. Korea because the association has heavily enhanced with the advocacy nonprofits to educate, research and consult with them for their initiatives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ere one of the main actors who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reform movement in S. Korea from the early 2000s and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intensively involved the growth of political democracy, economic justice, and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E. Kim, 2009; H. Kim, 1997).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KANGOS has played as a crucial player to develop academic and practical comprehension for the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in S. Korea.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KANPOR)

Korean Associ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KANPOR) is a unique association for nonprofit studies operating by both nonprofit scholars and practitioners at the South Korean nonprofit sector. KANPOR was founded in November 2000 by Gyu-hyun Chung (Yonsei University) and Taegy Park (Yonsei University) with the associates. The purpose of this association is to contribute the academic developing for Korean nonprofit sector, and aims to hone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skills and knowledge, and engage to strengthen members' capacities related to nonprofit practice in S. Korea. Besides, KANPOR has devoted to interacting with international nonprofit communities to acquire information of the global nonprofit sector and contribute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nonprofit sector. Specifically, KANPOR has dedicated their interests in the nonprofit topics for the inter function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suchlike donation cultu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KANPOR aspired the addressed agendas because another nonprofit researcher association, which is Korean Association for NGO Studies (KANGOS), contemporaneously was founded in the same year of their foundation in S. Korea had dedicated with external functions of nonprofits suchlike, advocacy, civil society and civil movement, and government partnership for public policy.

Origins

In the early area of the 2000s in S. Korea, Korean nonprofit sector had repeatedly expended and evolved with various formats and missions. In 1999, for example, the Community Chest of Korea³⁾,

3)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CCK) was established in 1999 as the first law-based, and specialized fundraising and allocation institution created based on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in 1998. CCK is the only government-sanctioned charity that enhances fundraising and allocations the funds. In 2018, total ₩5,965 million won (\$513 million USD) were fundraised. 66% of the funds were from corporations, and 34% were from individuals. Total ₩ 8,444 million won (\$725 million USD) were allocated. Total of 47% was awarded for supporting basic needs, followed by a total of 16% for education and self-support, 11% for healthcare and medical support (Community Chest of Korea, <http://eng.chest.or.kr/index.jsp>).

the first law-based fundraising and allocation institution, and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⁴⁾, the first independent foundation for women's issue, were founded. In 2000, the Beautiful Foundation⁵⁾, the first community foundation in Korea, and Kids & Future Foundation⁶⁾, the first independent foundation for children who are blind playing sports, was established. Furthermo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became a primary social agenda in the early 2000s in S. Korea. As the results of inquiry for CSR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the needs for academic endeavors about CSR was strongly accentuated by various units of the Korean society such as Korean government, business industrial, nonprofit practitioners, and scholars in nonprofit studies.

Based on these social inquiries and innovative challenges in the Korean nonprofit sector, some scholars gathered to discuss the addressed agendas such as philanthropic culture, volunteer, CSR, and the third sector research. Notably, the seven scholars and practitioners met to discuss the stressed issues and the possibility of forming an interdisciplinary association for the topics in 2000. The founding members of the discussion group includes Gyu-hyun Chung and Tae-gyu Park (Yonsei University), Chang-soon Hwang (Soonchunhyang University), Moo-sung Jung (Soongsill University), Yong-hee Ya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Kuk-hyun Moon (Chief executive officer at Yuhan-Kimberly, Inc.), and Won-soon Park (Chairman at the Beautiful Foundation). Initially, G. Chung, T. Park, and C. Hwang drove to create the study group for the third sector in early 2000 while

4)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 (KFW) was established in December 1999 as the first independent foundation for women in South Korea. KFW dedicate to empower women and increase women's contributions to Korean society. KFW also aims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all sectors and foster an environment where both women and men live in equal dignity and harmony. KFW was founded based on the initiate and commitment of 124 women's groups and leaders of the Korean society (Korean Foundation for Women, <http://women-fund.or.kr/background>).

5) The Beautiful Foundation (BF) was established in 2000 as the first community foundation in S. Korea. BF pursues to spread a mature philanthropic culture and to support neighbors in the community and pubic-benefit activities. BF have dedicated to develop giving culture in S. Korea and support creative public-benefit activities that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all citizens. BF created the first philanthropic research center publishing GivingKorea, Korean Philanthropy Index (The Beautiful Foundation, <https://beautifulfund.org/eng/index.php>).

6) Kids & Future Foundation (K&F) was founded on March 2000, based on the concerted will of entrepreneurs to provide divers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youth in the world to assist them in preparing themselves and their communities for a better future. K&F has conducted over 50 practical and differentiated projects for children and youth in S. Korea to design their own future, including scholarship, education, social events, and improvement of youth learning environments programs.

they referred the format of the study group from “Foundation research group⁷⁾” at the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After a year of dedicated discussions with G. Chung and the other six participants created a task force term to institute an association to research the nonprofit sector in S. Korea. Subsequently, C. Hwang, G. Chung, and T. Park drew up a constitution and bylaw with inputs from the task force team members. Finally, the Korean Associ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KANPOR) was established at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and the first academic conference in November 2000. G. Chung was the first President of KANPOR and the first board of trustees included G. Chung and T. Park (Yonsei University), C. Hwang (Soonchunhyang University), K. Moon (Chief executive officer at Yuhan-Kimberly, Inc.), and W. Park (Executive director at the Beautiful Foundation). In August 2004, KANPOR was formally incorporated as the registere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at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based on the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Support Act in S. Korea.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The first President of KANPOR was Cyu-hyun Chung and he served a 2-year term. Under C. Chung’s presidency, the bylaw was finalized 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was built. KANPOR composed the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the President, Vice-President, and Secretary; The Board of Trustees; The Advisory Committee; and The Sub-committees.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of KANPOR were intended to be a democratic process. President was elected by voting from the board of trustee members and the other officers we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In the present at 2019, Yong-hee Ya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have served as an elected President since 2017. He have constructed three appointed Vice-Presidents, one secretary in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board of trustees, thirty-one trustees are appointed. Six advisory board members are engaged in the organization. Eight subcommittees are operating, including 1) Social Economic committee; 2)

7) The Foundation Research group was formed in 1995 as a social network to share collected knowledge and experiences about a foundation. No record was found to address who led the group, but some scholars in nonprofit studies and staffs who worked at a foundation in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e network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knowledge with the members in the network. The group created a blog to communicate with its members.

CSR committee; 3) Academic committee; 4) NGO committee; 5)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committee; 6) Fundraising committee; 7) Foundation committee, and 8) Publication committee. Since KANPOR was established, the association have been run by the elected and appointed volunteer board of directors with incredible inputs from the board of trustees and committee chairs and members. Although main executive communications and decisions occurred at annual business meetings held at biannual conferences,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has held quarterly. After C. Chung served as the first President at KANPOR, seven other Presidents had led the association, including Tae-gyu Park, 2002 ~ 2006; Hyung-koo Moon, 2006 ~ 2010, Chang-soon, Hwang, 2010 ~ 2014, and Moo-sung Jung, 2014 ~ 2017.

Membership has slowly grown but haven't decreased, started with 60 members and grown with approximately 110 members in 2019. KANPOR has two types of membership including the general membership and the special membership. The general membership is a person who is currently engaged in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 related to the field of nonprofit studies; full-time employee and officer at nonprofit organizations; graduate student in nonprofit studies; and government officer who is working for nonprofit-related topics and person who is currently working in private companies for CSR or nonprofit related works. The special membership is a person, institution, or company who agree with the purpose of the association and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association. In addition, an entity provides a certain amount of donations to the association shall be the special member. In 2019, KANPOR has 115 registered individual as the general member and five organizations registered as the special member. Thirty percent of members were from social work/ social welfare and thirty percent of the members were from economics/business, followed by 10% from Law/Public Administration/Public Policy, and 5% from sociology/psychology. Approximately 25% of the members were from other disciplines.

Activities

KANPOR have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and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nonprofit sector in S. Korea. Biannual conferences began in 2000. The first conference was held at Seou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November 2000, was attended by more than 50 people, including numbers of named presenters in the conference program. A variety of topics in nonprofit research were presented based on many different disciplinary perspectives. From the conference, some of the new people were willing to help as volunteers with running KANPOR. Subsequent conferences, held twice per year since 2000, have continued with diverse agendas. Specifically, KANPOR has focused practical agendas in nonprofit studies including “philanthropy,” “Business and nonprofit alliances,” “nonprofi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economy.” The agendas have been selected based on KANPOR’s core values containing field-based research for nonprofit studies, emphasizing the partnership between private and nonprofit sectors, and spotlighting nonprofit professionalism.

After than the biannual conferences, KANPOR has dedicated to publishing their own journal for nonprofit studies, named as “Korean NPO Review (KNPOR).” The first journal was published in 2002, but it was initially self-published by the Blue Publisher, Inc. Since the first volume was published KANPOR have devoted their initiatives to registering the journal to Korean Citation Index (KCI)⁸⁾. In 2006, KNPOR obtained the KCI candidate status, but it was eliminated in 2010 because of simple administration mistakes. However, the 8th and 9th President, Moo-sung Jung and his administration dedicated to re-submit the journal to receive the KCI candidate status and finally approved as the candidate status in 2017. KANPOR have dedicated to acquiring registered status in KCI for KNPOR because it is important to publish valid and qualified research papers in the journal. Since the first volume of KNPOR was published, 17 volumes have been published with various topics. Most recently, Jong-chul Park (Chosun University) has served as editor since 2014, with five publish committee members, including Sung-ho Kang (Chosun University), Young-sook Ka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Soon-young Mo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Ji-eun Choi

8) KCI (Korea Citation Index) is the system to analyze citation relationship among articles based on the database constructed by information about domestic journals, articles (including original papers) and reference (KCI, <https://www.kci.go.kr/kciportal/aboutKci.kci>).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Sang-mi Choi (The Seoul Institute).

Besides of the journal and the conferences, the two major initiatives should be addressed KANPOR's history includes the research project to present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CSR done by KANPOR in 2005, and 2013 8th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ISTR)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 in Seoul, Korea, hosted by KANPOR.

In 2005, Tae-gyu Park, as the 2nd and 3rd President, 2002 ~ 2006, and the principal investigator, led the significant research project, nam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aluation Index" with his colleagues in KANPOR, including Hyeng-gu Moon, Yong-hee Yang, Han-jung Lee, Moo-sung Chung, and Heung-sik Cho.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d CSR evaluation index to analyze current CSR activities from top businesses in S. Korea and to generate valid and efficient strategic planning for future CSR activities in S. Korea. The project was sponsore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nd ten major companies in S. Korea. The Index was the first academic index to clarify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CSR in S. Korea and created national standard evaluation criteria for CSR activities in S. Korea. The index has cited as the key reference to identify CSR activities and evaluate it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 Park and his colleagues at KANPOR put tremendous and successful effort to create and report the Index for the association that made more valuable and attractive to people in the nonprofit sector.

In 2013, KANPOR hosted the 8th ISTR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 in Seoul, Korea, which was the first time for Korea to hos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scholars and researchers on nonprofits and the third sector. The meeting was co-organized by KANPOR and Institute for East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ISTR, October-December 2013). The program included two plenary sections, five panels, one roundtable, and seven parallel sessions. Chang-soon Hwang, as President the 6th and 7th President, 2010 ~ 2014, and T. Park heavily involved in organizing the conference. The conference wa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make international networks with KANPOR.

Contributions to South Korean Nonprofit Sector

KANPOR is the first interdisciplinary, academic and practical professional association ever formed with a focus on practice-based nonprofit agendas such as nonprofit management skills and knowledge, philanthropic cultur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During the last decades, the association has performed as the key player through education, research, consulting to scholars, practitioners, and even to the general public in Korean nonprofit sector by the enthusiastic participation from the association's leadership and dedications. The association has published more than 380 articles in their own journal– KNPOR,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first CSR evaluation index in S. Korea, and hold the first international nonprofit conference, 2013 the 8th ISTR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 in Seoul, Korea.

At the same time, KANPOR has provided academical insights to develop various nonprofit education programs and research centers at several foundatio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S. Korea, as corresponding the growth of the need of professionalized training in nonprofit fields in S. Korea. Many of nonprofit research centers and institutional-based nonprofit education programs have developed with professionals who are often active members of KANPOR. Specifically, KANPOR has dedicated to interacting with the international nonprofit communities to broadcast Korean nonprofit sector around the world for 20 years.

History of Korean Nonprofit & Philanthropy Researchers' Network (KNPRN)

The Korean Nonprofit & Philanthropy Researcher's Network (KNPRN) is the United States based Korean scholarly association for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KNPRN is the first interdisciplinary association ever formed for Korean scholars who were located in the United State with a focus on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including nonprofit organizations, philanthropy, civil society, accountability,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nd leadership, volunteering, and a host of other related topics and issues.

Under the leadership by Sung-ju Kim, who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NC State, and the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KNPRN, The network has worked to share and exchange information or opportunity for research and other academic activities in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for Korean nonprofit and philanthropic researchers since 2008. The purposes or the association were to provide guidance and support for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and to make professional contributions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U.S. employing academic resources and leadership for Korean nonprofit and philanthropic researchers. In 2019, total fifty-two members are registered, and approximately thirty-two member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Most of the members at KNPRN studied or are studying nonprofit and philanthropic topics at various disciplines in the U.S., including public administration/affair school, social work school, public policy, and education school in the U.S.

The first formal step leading toward the establish the KNPRN was taken in November 2008 at the 37th Association of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ary Action (ARNOVA) annual conference at Chicago. IL. S. Kim hosted the first assembly for Korean attendees at the ARNOVA conference as titled as "Korean nonprofit researchers meeting."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develop a network with Korean researchers and scholars in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and to share their studies and researches. Total 12 Korean attendees at the conference were presented at the first Korean nonprofit researchers meeting. Since the first meeting at the ARNOVA annual conference

in 2008, KNPRN have an annual meeting at the ARNOVA annual conference with regular members and newly joined members.

Prior to the first formal assembly in 2008, a few Korean scholars in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in the U.S. had discussed the need for a network of Korean students and/or scholars in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In 2003, Hyung-jin Lee, who later became a publisher, named Arche in South Korea, and S. Kim met at the Mandel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 at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as PhD student and MSW student and discussed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in the U.S. After years of discussions, they agreed on the need for the Korean network in nonprofit studies because only a few Koreans had studied nonprofit and philanthropic topics for their major in higher education not only in the U.S. but also in South Korea. They dedicated to making a network with Korean scholars in nonprofit studies, but no structured group or association for Korean nonprofit researchers organized in the U.S. until 2008.

While H. Lee and S. Kim had developed the idea for the Korean network in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Sang-dong Tak, who was PhD student in philanthropic studies at Center on Philanthropy in Indiana University (The Lilly School of Philanthropy in present) and Lewis Lee, who became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Alabama began to get involved in the discussion group. With years of debate and discussion, the first formal assembly for Korean nonprofit researchers meeting was organized at the 37th ARNOVA conference in 2008.

KNPRN have grown out from the first meeting in 2008. A number of other people began to get involved in KNPRN to share information and research topics in nonprofit studies. Especially Bok-gyo Jeng (Kean University), Ji-won Suh (University of Texas Arlington) dedicated to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Korean researchers association for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With the members, S. Kim developed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administrations, programs, and membership requirements, etc.

Any formal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did not organize until 2018. During the years of discussion and negotiation with the initial members, the leadership board was established in 2018. The leadership board members included S. Kim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Ji-won Suh (University of Texas Arlington) and Seoung-ho An (University of Pennsylvania), respectively. Under the leadership by the board members, KNPRN successfully

registered as the Common Interest Group (CIP) at ARNOVA in 2019. The first committee, which was the Advisory board, was created in 2019. The advisory board is providing mentorship and professional advising for their expert topics to the fellow KNPRN members. The first advisory board members included Mee-young Lamothe (University of Oklahoma), Mi-rae Kim (Georgia State University), Bok-gyo, Jeong (Kean University), and Lewis Lee (University of Alabama).

As an executive director, S. Kim has organized several programs. In 2005, KNPRN created the Facebook group for the organization to communicate with members, later in the summer of 2019, the association's Internet Web site was begun by Seungho An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o more efficiently interact with the members and the other Korean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Since 2017, "Nonprofit book launch campaign" and "book review relay" to introduce and recommend the books for nonprofit studies have developed. More than fifty books for various topics of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were recommended and its members posted several books reviews.

KNPRN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guiding and sharing scholarly knowledge and experiences about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with Korean-American students and scholars in the U.S. There were no formal or informal interdisciplinary scholarly group sharing their studies, researches, and experiences in nonprofit studies dedicated to Korean scholars and researchers in the U.S. Only a few numbers of Korean scholars had studied nonprofit and philanthropic topics as their major in higher educ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2000s. However, recent years have been a time of burgeoning growth in the number of Korean scholars in nonprofit studies and KNPRN have played as the major network group to share and hone their knowledge in nonprofit and philanthropic studies.

Reference

-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n.d) Introduction. Retrieved from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
-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October-December 2013). Inside ISTR. Retrieved from https://cdn.ymaws.com/istr.site-ym.com/resource/resmgr/inside_istr/istr_newsletter_12_15_13c.pdf
- Jeong B., & Kim Sung-Ju .(2019). NPO/NGO higher educ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Journal of Nonprofit Educational and Leadership*, 9(1), 39-62.
- Jung, Jin-Kyung. (2013). A Comparative Study on Volunteer Policies in Swed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the context of Welfare Countri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2):137-160
- Kim, E. (2009). The limits of non-government relations in S. Korea, *Asian Survey*, 49(5), 873-894.
- Kim, H. (1997). Korean NGOs: Global trend and prospect, *Grable Economic Review*, 26, 93– 115.
- Kim, I. & Hwong, C. (2002).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South Korea. Working paper of 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No. 41. Baltimore: Th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2005). Survey on the statu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Retrieved from [Retrieved from http://www.nporesearch.or.kr/english.html](http://www.nporesearch.or.kr/english.html)
- Korean Associ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 Research (n.d). Introduction of KNPOR. Retrieved from <http://www.nporesearch.or.kr/english.html>
- Korean Citation Index (n.d). KCI introduction.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aboutKci.kci>
- Lee, S., & Arrington, C. (2008). The politics of NGOs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S. Korea and Japan, *Pacific Focus*, 23(1), 75-96.
- Lindblom, C. E., & Cohen, D. K. (1979). *Usable knowledge: social scie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ubienski, C., Scott, J., & DeBray, E. (2014). The politics of research use in education
- NANUM Research Center on Philanthropy (n.d.). Introduction. Retrieved from <http://www.nanumresearch.or.kr>
- Park, S. (2019, March 27). Interviewed by J. Jeong [phone recording]. KNGOS History Project.
- Perna, Laura W., Orosz,Kata., & Kent, D.C. 2019.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academic researchers in congressional hearing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6(1),111-145.
- Smith, D. H. (2003). A history of ARNOV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2(3), 458-472.
- Smith, D. H.(2013). Growth of research associations and journals in the emerging discipline of altruistic.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2(4), 638-656.
- Smith, D. H.(2016). A survey of voluntaristics: research on the growth of the global, interdisciplinary, socio-behavioral science field and emergent inter-discipline. *Voluntaristics Review*, 1(2):1-81.
- The Korean Association of NGO Studies (n.d). History of the KNGOS. Retrieved from http://www.ngo21.net/introduction/intro_02.asp

한국 Voluntaristics 학술조직/네트워크 조사연구 질문지

Questions for Korean Voluntaristics Researcher Associations/ Networks:

(Voluntarism, Civil Society, Nonprofit Sector, Third Sector, Voluntary Sector, and Social Economy Research)

Prof. David Horton Smith, Ph.D., Principal Investigator,
ICSERA Founder, President, and CEO

Prof. Jin-Kyung Jung, Ph.D., KwangWoon University

Prof. Sung-Ju Kim, Ph.D.,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존경하는 학회장님께,

먼저 본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배경이 되는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프로젝트는 David H.Smith 교수님 - ARNOVA(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Voluntary Action; www.arnova.org)와 ICSERA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ism, Civil Society, and Social Economy Researcher Associations; www.icsera.org) 설립자 - 의 연구 책임하에, 전 세계적 차원/국제지역 차원/개별국가 차원에서 비영리/시민사회/자원섹터/필란트로피/사회적경제 분야 연구조직(통칭하여 Voluntaristics Researcher Associations) 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핸드북으로 집필되는 국제 연구(History of Voluntaristics Researcher Associations Globally)입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인도 등이 참여하며 이들 국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략 14개의 학술조직을 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사대상 학술조직으로는 Smith(2016)에 의해 소개된 바 있는 3개의 대표적인 학술조직으로, 한국비영리학회와 한NGO학회 및 한국비영리필란트로피 연구네트워크 (KNPRN)입니다.

지난 40여년간 전세계적으로 Voluntaristics 연구분야가 성장하여 왔고(Smith,2013), 한국 역시 많은 학회들이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학술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해외 연구에서 한국의 Voluntaristics 분야에 대한 소개와 연구 참

여가 제한적(부록에 소개되는 정도)이었음을 아쉬워 하며, 한국 Voluntaristic Researcher Association에 대한 연구를 김성주 교수(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와 정진경 교수(한국 광운대학교)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연구프로젝트는 비예산연구로 수행되며, 다만 한국 연구에 대해서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후원을 합니다.

한국 Voluntaristics 학술조직/네트워크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 놓여진 애로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본 국제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으로 VR 학술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간 VR 학술 조직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Voluntaristics 연구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 학회와 세계 여러 학술조직간에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력하나마 한국에서의 본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조사대상 학술조직을 확장하며 역사적으로 축적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Voluntaristics 연구 분야가 다학제적 독립된 학문분야로 그려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지는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시간 내외의 인터뷰를 통해 소중한 의견과 자료/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1차적으로 연구진이 기입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Section 1] General information and History of the Association

1. 귀 학회의 정확한 ‘영문 명칭’ 은 무엇입니까?

1-1) 귀 학회의 정확한 ‘한글 명칭’ 은 무엇입니까?

1-2) 귀 학회 명칭의 약칭 또는 약어(줄임말) 표기는 무엇입니까?

(e.g., like ARNOVA or ISTR)?

(국문 또는 영문 약칭) _____

2. 귀 학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때는 언제입니까? (월 / 년도)

2-1) 귀 학회가 설립될 당시 학회 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셨던 주요 리더들은 누구였습니까?

(성명, 소속, 이메일주소)

3. 다음은 학회 설립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귀 학회가 설립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사회적 배경, 학문적 동기, 유사학문 연구자들의 요구 등 일반적 환경과 직접적인 설립 계기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2) 설립시에 참가하신 분들의 학문적 배경과 설립시에 논의되었던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3) 설립 당시, 학회의 성격과 목적을 설정하고 규정(identify) 할 때 어떤 절차와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 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4) 학회설립 이후 학회를 리드한 leadership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Section 2] Structure and Governance of the association

4. 귀 학회는 법인(corporation)입니까?

(a) Yes _____ (b) No _____

4-1) 귀학회가 법인이면 어떤 법인입니까?

5. 귀 학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a) Yes _____ (b) No _____
(if no, 어디를 학회 사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6. 다음은 학회의 조직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6-1) 귀 학회의 조직 체계와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문/이사회/분과위원회/사무국 등 조직 하위체계 구조와 각 하위체계별 구성인원 등)

6-2) 현재 학회를 이끄는 핵심 운영위원(분과위원장 등)들은 누구이신지 알려주십시오.

(이름, 학회내 직위, 소속기관/대학, 이메일주소)

6-3) 귀 학회의 조직체계가 설립당시부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알려 주십시오

7. 다음은 귀 학회 회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7-1) 현재 귀 학회의 등록 회원은 몇명입니까? _____명

7-2) 귀 학회의 회원가입 등록은 유료/ 무료 입니까?

유료 _____ 무료 _____

7-3) 귀 학회는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연간 회비를 받으시나요?

예 _____ 아니요 _____

7-4) 귀학회의 회원은 주로 개인 회원 또는 기관 회원입니까?

(a) 대체로 개인 회원: _____

(b) 대체로 기관 회원(대학, 기관/단체, 연구소 등): _____

(c) 개인/기관 회원 모두 _____

7-5) 회원 유형별로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수는 얼마입니까?

(a) 개인회원 수: _____

(b) 기관회원 수: _____

7-6) 개인 회원들의 주전공 학문분야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a) 사회복지/사회사업 : ___%

(b) 법학/행정학/정치학: ___%

(c) 사회학/심리학 : ___%

(d) 경제학/경영학 : ___%

(e) 기타 : ___% (기타 전공 기입: _____)

7-7) 귀 학회는 회원 명부를 갖고 계십니까?

(a) 예 ___ 회원 명부 제공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복사본/파일 등).

(b) 예 ___ 그러나, 회원이 아닌 제3자에게 회원 명부를 제공하기 어려움.

(c) 아니요 ___

7-8) 귀 학회의 회원은 한국 사람들만 회원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예 _____ 아니요 _____

[Section 3] Financial resources

8. 최근 3년간 귀 학회의 년평균 재정수입과 운영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a) 년평균 재정수입 규모 _____ 원

(b) 년평균 운영예산 규모 _____ 원

9. 최근 3년간 귀 학회 재정수입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셨습니다습니까?

(a) 회비 등 자체 자원 : _____ %

(b) 정부보조금: _____ %

(c) 학술연구재단 : _____ %

(d) 개인기부금: _____ %

(e) 기업 : _____ %

(f) 기타 : _____ %

[Section 4] Values and Environment

10. 현재 귀 학회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회의 목적/목표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11. 위에서 언급한 현재의 주요 목적과 사명이 설립초기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a) 변화 없음 _____
- (b) 다소 변화됨 _____
- (c) 상당히 변화됨 _____

11-1) 만약 다소 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면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왜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12. 최근 7년간 학회에서 주로 강조되어 왔던 연구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비영리 경영, 자원개발, advocacy, governance, evaluation, etc)

13. 최근 7년간 학회에서 주로 강조되어 왔던 비영리섹터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비영리 투명성, 비영리 섹터의 전문성, governance, evaluation 등)

14. 현재 학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 학회운영의 민주성, 지속가능성, 학문적 이론의 주도성, 현장과의 파트너십 등)

15. 귀 학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외부기관은 어디입니까?(우선순위)

- (a) NPO/NGO/SEs : _____
- (b) 국내 대학/학술연구기관 : _____
- (c) 국제 대학/학술연구기관 : _____
- (d) NPO/NGO 관련 연구자 (교수 포함) : _____
- (e) 정부 : _____
- (f) 기업/언론 : _____
- (g) 기타 : _____

16. 귀 학회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a) 실천현장(NPO/NGO/SEOs 조직과 전문가) : _____

(b) Public sector (정부, 정책) : _____

(c) 재정 스폰서(기업/재단 등) : _____

(d) 학문/연구자 : _____

(e) 기타 () : _____

17. 귀 학회의 활동이 한국의 NPO/NGO 섹터의 발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기여 점수 (1점-10)	비해당
a. 비영리섹터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도입 또는 개선에 기여		
b. 비영리섹터 현장(조직과 활동가)에서의 전문적 지식과 실천역량의 향상에 기여		
c. 한국사회의 philanthropic 문화 확산에 기여		
d. 사회혁신 등 비영리섹터의 범위와 성과확산에 기여		
e. 비영리섹터 관련 연구와 교육의 발전에 기여		
f. 기타 : _____		

17.1) 위 각 항목에 대한 귀 학회의 기여점수를 부여하신 이유를 고려하시면서 귀 학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17-2) 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재한 영역에서 학회가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별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case examples)

17-3) 위 항목 이외에 기타 학회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Section 5] Output and Outcome

18. 다음은 귀 학회의 모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18-1) 귀 학회는 운영회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a)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_____
- (b) 한달에 한번 _____
- (c) 분기에 한번 _____
- (d) 일년에 두번 _____
- (e) 일년에 한번 _____
- (f)비정기적 간헐적 _____

18-2) 귀 학회의 이사회의 모임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a)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_____
- (b) 한달에 한번 _____
- (c) 분기에 한번 _____
- (d) 일년에 두번 _____
- (e) 일년에 한번 _____
- (f)비정기적 간헐적 _____

18-3) 이사회회의 모임에는 대략 몇명 정도 참석하십니까?

_____ 명(참여율 %)

18-4) 귀 학회는 총회를 일년에 몇 번 하십니까?

(a) 총회를 하지 않는데 _____

(b) 일년에 한번 _____

(c) 일년에 두번 _____

18-5) 총회에는 대략 몇명 정도 참석하십니까?

19. 설립이후부터 2019.2 현재까지 개최한 학술컨퍼런스는 총 몇 회입니까?

20. 최근 5년간의 학회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21. 학술컨퍼런스의 주제는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21-1)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하십니까?

(A) 학술대회때 마다

(B) 연간 주제를 미리 설정

21-2) 어떠한 배경과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합니까?

(예, 현장 및 정책적 현안 current issue,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아이디어, 학문적 유행,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22. 귀 학회는 뉴스레터를 발행하십니까?

(a) 예 ____ (파일이나 스캔 복사본으로 가장 최근의 뉴스레터를 부탁드립니다)

(b) 아니오 ____

23. 귀 학회는 학술지를 발간하십니까?

(a) 예 _____ (b) 아니오 _____

23-1) 학술지를 발간하신다면,

학술지 명(국문): _____

학술지 명(영문): _____

23-2)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된 학술지입니까?

(a) 예 (KCI 등재 / 등재후보 / 비등재)

(b) 아니오

23-3) 본 학술지는 일년에 몇 번 출간됩니까?

23-4) 지금까지(2019.2) 본 학술지는 총 몇 회 출간되었습니까?

23-5) 현재까지 발간된 학술지 목록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24. 학술지 또는 newsletter 이외에 귀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이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Section 6] Global Interaction with Voluntaristics researcher Associations

25. ISTR (www.istr.org)과 ARNOVA (www.arnova.org)는 Voluntarism, Civil Society, Nonprofit Sector, Third Sector, Voluntary Sector, and Social Economy Research 분야를 연구(통칭하여 Voluntaristics) 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국제 학술조직입니다. 귀 학회 회원 중 ISTR과 ARNOVA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있다면 대략 몇 명정도입니까?

(a) 학회 회원 중 ISTR에 가입한 회원 수 : _____

(b) 학회 회원 중 ARNOVA에 가입한 회원 수 : _____

26. 회비 또는 연회비는 우리에게 큰 비용적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원은 아니더라도 ARNOVA 또는 ISTR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귀 학회 회원 중 ARNOVA 또는 ISTR의 회원은 아니지만, 2018-2022 사이에 이들 컨퍼런스에 참여했었거나 참여 예정인 회원이 있다면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a) ARNOVA의 회원은 아니지만, ARNOVA 컨퍼런스에 참석한 회원수 : _____

(b) ISTR의 회원은 아니지만, ISTR 컨퍼런스에 참석한 회원수 : _____

27. 귀 학회의 리더 중 향후 ICSEERA 에서 contact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리더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Thank you for your dedication for this survey

2019년
기획연구
보고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시리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 기획연구1]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자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첫 번째 기획연구로서, 건강한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법제도 확립과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개선 연구’를 통하여 기부관련 세법제도개정안(이월공제기간 5년으로 연장_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이 통과되는 첫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9 기획연구2] 부유층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연구

연구자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이민영(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부문화의 성장과 함께 고액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액기부에 대한 연구와 정보에 대한 요청이 높아졌습니다. 부유층의 고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을 기부선진국의 수준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두 번째 기획연구가 기획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부에 대한 인식과 기부형태를 분석하여 향후 건강한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건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2010 기획연구3]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연구

연구자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오준석(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009 기획연구2를 통해 확인된 부유층 기부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 계획기부(planned Giving)의 개념과 실행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전 생애의 라이프사이클과 자산운용, 유산상속을 함께 고려하며 계획적으로 기부를 실행하는 계획기부는 유산기부와 고액자산기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매우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이 포함되는 계획기부를 개념, 법률, 금융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추후 한국사회에 다양한 기부상품과 제도적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습니다.

[2011 기획연구4]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계획기부 연구

연구자 오준석(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010 기획연구3에 이은 후속연구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맥락에서 계획기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계획기부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미국의 실제 계획기부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법적 환경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여 향후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환경과 인프라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 기획연구5]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연구자 이상민(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최초로 민간공익재단의 현황과 역할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재단정보를 취합하여 통계적 자료 분석을 통해 공익재단의 사업분야, 설립주체, 설립연도, 등록부서, 자산의 규모 등을 분석하고, 민간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이들 법과 제도가 지난 40여년의 기간 동안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의 민간 공익재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된 연구입니다.

[2013 기획연구6]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

연구자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실공익법인 지정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연구’, ‘국내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세법적 규제의 변화 및 기본방향’, ‘기존 나눔통계를 활용한 국내 나눔총량 추계’, ‘국내기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 동향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기부문화 현황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도입 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진행된 연구입니다.

[2014 기획연구7]

연구자 이형진(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한동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철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민화(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BK21+연구원)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필란트로피(Philanthropy)란 무엇인가?’, ‘한국인의 상호부조 행동분석’, ‘비영리조직의 모금 활동의 성공과 실패요인 분석’, ‘모금 실무자의 윤리적 딜레마’, ‘고액기부자들의 기부선택을 위한 3가지 제도:법인과 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 비교연구’, ‘가구 유형별 기부행태 및 가구 내 기부결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 등을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 나눔문화와 모금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된 연구입니다.

[2015 기획연구8]

연구자 조상미(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형진(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민화(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다국적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시민됨과 기부’, ‘재단과 책무성’, ‘비영리조직 모금 활동의 윤리적 풍토와 대처에 관한 연구’, ‘공익연계마케팅(CRM)관련 과세제도 연구’ 등을 통해 국내 기부문화에 관해 모금현장과 기부자, 사회일반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6 기획연구9]

연구자 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진경(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온라인 모금캠페인의 내용 및 성과 분석’,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 연구’, ‘신문자료에 나타난 기부 관련 특성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기부문화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비영리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7 기획연구10]

연구자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문필주(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허원(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손선옥(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소영(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노연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부금품 위반 관련 사례 분석’, ‘준조세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 지역 복지재단의 유형별 역할과 성격 연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비영리섹터의 법제도 및 지역재단 연구를 수행하며 모금현장의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018 기획연구11]

연구자 강형구(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 배경훈(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
신은정((주)Corporate L 대표/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미국학과 겸임교수), 박철(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서희열(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PO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사례 연구 및 적용방안’, ‘소셜미디어 구전과 모금캠페인 특성이 모금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부금관련 세법개정 내용과 기부금단체의 대응방안’, ‘공익성 및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비영리섹터에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과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을 통해 비영리섹터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본 기획연구 자료는 기부문화연구소 블로그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research.beautifulfund.org) 블로그에서는
기부문화연구소의 기획연구와 그 외 다양한 기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획연구
보고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01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기부문화연구소입니다. 사회복지, 회계세무, 법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모여 기부, 모금, 비영리운영에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교육, 출판, 정보 교류를 통하여 기부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비영리단체 실무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개인과 기업의 기부행동과 인식을 조사하는 ‘기빙코리아’를 통해 기부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0년~2015년까지 개인기부조사와 기업기부조사를 번갈아 진행하였고 2017년부터는 모금을 받는 비영리기관조사와 개인기부조사를 번갈아 진행합니다.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의 조사분석결과와 원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기획연구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비영리기관의 모금능력 향상 및 효과적인 정책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기획하여 수행합니다. 고액 및 자산기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부 연구 시리즈”와 법제도 개선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변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비영리 투명성 강화, 법제도 현실화 및 기술변화에 따른 비영리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협력과 파트너십

-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 (Doing Good Index : DGI)**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 CAPS)’와 함께하는 아시아 15개국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
- **나눔지식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www.childfund.or.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http://www.chest.or.kr/>)가 나눔지식을 교류하는 나눔지식네트워크
- **국제비교연구 (Global Philanthropy)**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부문화 관련 국제비교인 글로벌 필란트로피 환경지수와 글로벌 필란트로피 자원공급지수 한국데이터 발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연구자료는 홈페이지(research.beautifulfund.org)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Tel 02-766-1004

E-mail research@beautifulfund.org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옥인동13-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9 기획연구 보고서

발행일 2019년 10월 23일
발행처 아름다운북
발행인 한찬희
지은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편집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주소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전화 (02)766-1004
전송 (02)6969-5196
웹사이트 www.beautifulfund.org
디자인·인쇄 해든D&P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9년 기획연구 보고서



값 15,000원



9 788993 842494
ISBN 978-89-93842-49-4
ISBN 978-89-93842-06-7 (세트)